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 소득 및 고용·인구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이규민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황종률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작성 |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지원 | 김선정 행정실무원
채소예 자료분석지원요원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

202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9. 2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경제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소득의 분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의 성장을 확인하는 경제 지표 뿐 아니라 한 해의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에 분배되는 소득 지표를 통해 입체적인 경제 순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의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망에 더하여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소득분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전망 분야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제Ⅰ권 「지출 부문」은 GDP,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항목과 소비자물가를, 제Ⅱ권 「성장 및 금융 부문」은 잠재성장률, 총요소생산성, 금리,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Ⅲ권 「생산 부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을, 제Ⅳ권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은 국민총소득과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소득변수와 인구·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고정자본의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자본집약형 경제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세입 중 간접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있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주체별 소득의 분배구조 조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순환 구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및 중기 소득 및 인구·고용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국내총생산(GDP)	3.4	1.4	0.8	6.7	4.7	4.6
비용자보수	5.3	5.2	2.4	6.1	8.3	4.8
영업잉여	-1.1	-9.0	-7.1	5.3	-2.2	4.3
고정자본소모	5.7	6.3	4.7	8.2	3.4	3.9
순생산 및 수입세	2.7	1.5	4.2	10.0	4.6	5.8
국민총소득(GNI)	3.4	1.9	0.9	7.0	4.4	4.7
1인당 GNI(% , 달러)	5.8	-4.0	-0.6	10.5	-7.1	8.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구	총인구	-0.16	-0.12	-0.03	-0.06	-0.10	-0.13
	합계출산율(명)	0.81	0.76	0.74	0.71	0.70	0.69
고용	취업자수	1.4	2.9	0.3	0.4	0.4	0.4
	고용률	60.5	62.0	61.9	61.9	62.0	62.0
	경제활동참가율	62.8	63.9	64.1	64.3	64.3	64.4
	실업률	3.7	3.0	3.4	3.7	3.7	3.7
	임금상승률	4.6	4.9	3.9	3.9	3.6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분배국민소득의 구성비]

(단위: %, %p)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용자보수	45.7	47.5	48.2	47.9	49.6	49.6
영업잉여	25.8	23.1	21.3	21.0	19.6	19.6
고정자본소모	18.9	19.8	20.6	20.9	20.6	20.5
순생산 및 수입세	9.6	9.6	9.9	10.2	10.2	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요 약

I. 국민총소득 및 분배 구조

1. 국민소득

□ 국민소득통계는 생산과 분배,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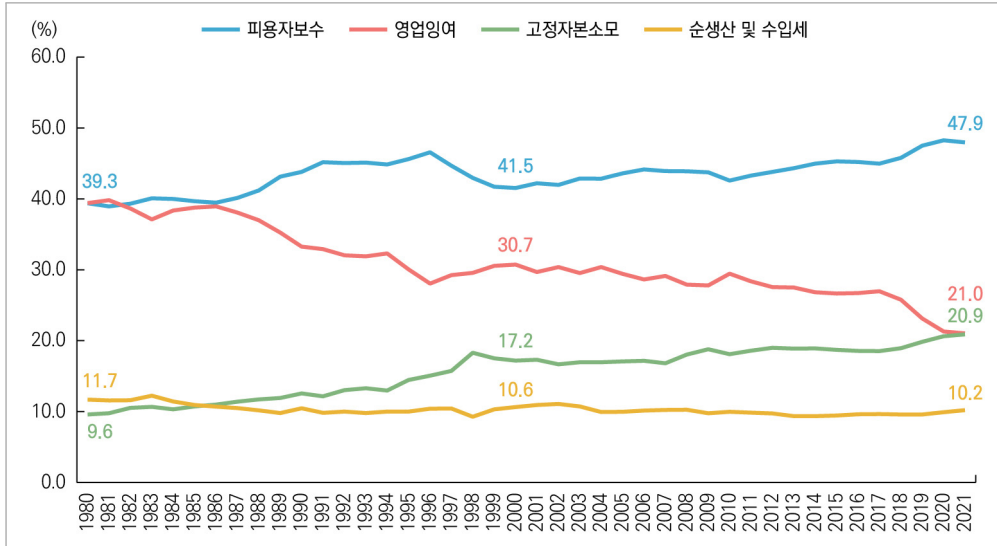
-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소득의 분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노동과 고정자본, 정부, 기업에 분배된 현황을 파악
 -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
-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국내총생산에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순소득을 추가

2. 분배 부문별 동향

□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경제주체 간 소득의 분배 현황을 파악

- 1980년 노동소득(피용자보수)과 영업잉여는 39%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기준 각각 48%와 21%로 변화
 -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경제활동의 구조변화에 기인
-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와 비교하면, 한국은 피용자보수 비중이 낮고 영업잉여는 높은 편
 - 2020년 기준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은 한국이 48.2%이며 미국은 55.4%, 독일은 54.3%, 일본은 52.6% 수준
 - 2020년 기준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한국이 21.3%이며, 미국은 24.6%, 독일은 18.3%, 일본은 13.7% 수준

[분배국민소득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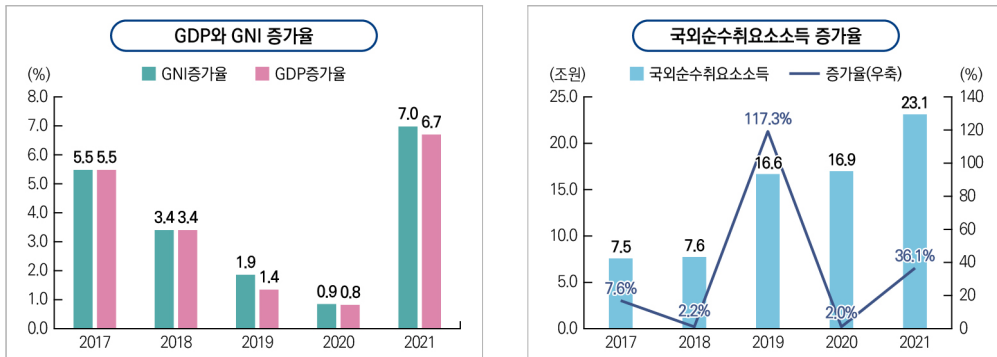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최근 3년간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증가

- 동 기간 국외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 해외직접투자와 주식시장투자가 증가하여 국외자본소득수지 흑자가 증가
- 1인당 GNI는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경제적 구매력을 의미하는데, 2021년 기준 35,373달러로 OECD 중 21위였으며, 1인당 GDP보다 높음

[국민총소득 증가율 비교]



자료: 한국은행

3. 인구 및 고용 동향

□ UN(2022)은 2050년까지 전세계 인구 규모는 증가하나 증가율 둔화 전망

- UN 인구전망(2022)은 전 세계 인구 규모는 2022년 79.1억명에서 2050년 97억명으로 증가하나, 인구증가율은 2020년부터 1% 미만으로 둔화
 - 인구증가율(%): 2010년 1.27, 2020년 0.98, 2040년 0.65, 2050년 0.47
 - 전세계 합계출산율은 2021년 2.3명에서 2050년 2.1명으로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2019년 72.8세에서 2050년 77.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가소득별로 인구증감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인구자연감소(출산-사망) 증이나 이민인구의 증가가 인구규모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 인구자연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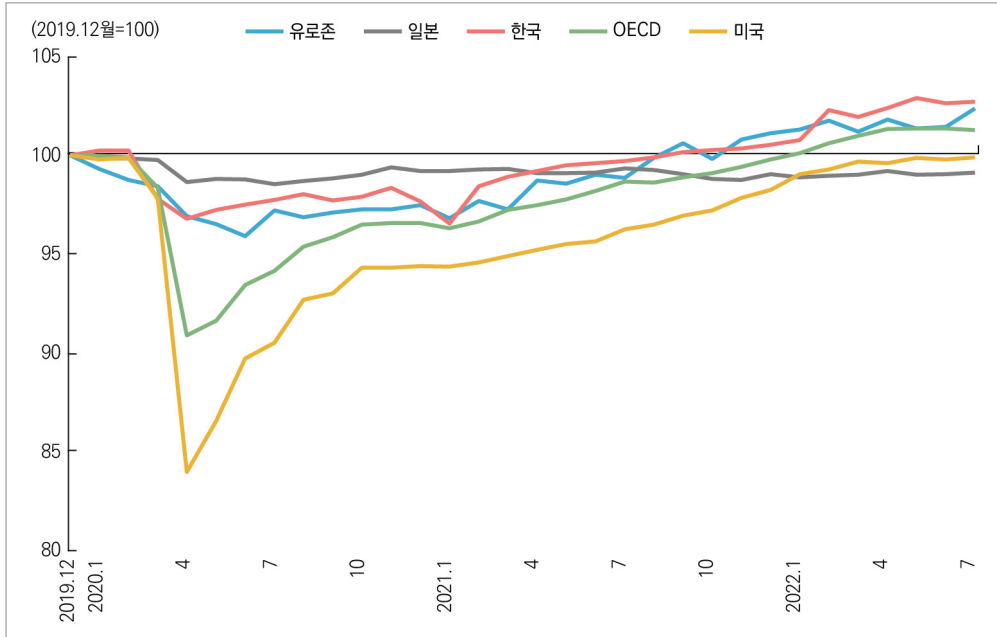
□ 통계청(2021)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여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 전망
 -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2.3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주요국 취업자 수는 2021년 하반기 기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점차 회복

- 한국, 유로존, OECD 등의 취업자 수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세계적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남
 - 이후 점차 회복하여 한국 및 유로존 등은 2021년 하반기, OECD는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의 취업자 수준으로 복귀
 - 다만, 미국은 2022년 8월에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고, 일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양상
- 2022년 상반기, 한국 및 미국 등에서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 기록
 - 2022년 상반기 한국의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전기대비 2.0% 증가, 미국은 2.4% 증가
 - 동 기간, OECD 및 유로존의 취업자 수도 전기대비 1.9%, 1.3%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한국 및 주요국 취업자 수 변화 추이(계정조정)]



자료: OECD(2022), 통계청

II. 국민총소득 및 분배 전망

1.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는 2022년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23년 증가율 둔화

- 피용자보수는 2022년 8.3%, 2023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고용 호조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가 큰 폭 증가하고 임금상승률 또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여 피용자보수가 크게 증가
 - 2023년은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이 2022년 대비 둔화되어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4.8% 수준으로 하락
- (상방요인) 임금-물가 연쇄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률 상승
- (하방요인) 임금상승률 둔화, 임금근로자 증가세 둔화

2. 고정자본소모

- 2023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3.4%)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고정자본소모는 총고정자본형성과 명목GDP 증가세의 영향으로 3.4% 증가하고, 2023년에는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방요인) 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연구개발자산의 투자 증가
 - 연구개발투자 증가는 내용연수가 짧은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을 증가
 - (하방요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감소하고, 명목GDP 성장의 둔화

3.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2년 및 2023년 양호한 증가세 지속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2년 4.6%, 2023년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과 2023년의 명목GDP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의 수입 및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는 과정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이 상승
 - (상방요인) 수입세 환급액 증가 둔화
 - (하방요인) 경제성장률 하락, 수입 둔화로 인한 수입세 증가 둔화

4. 영업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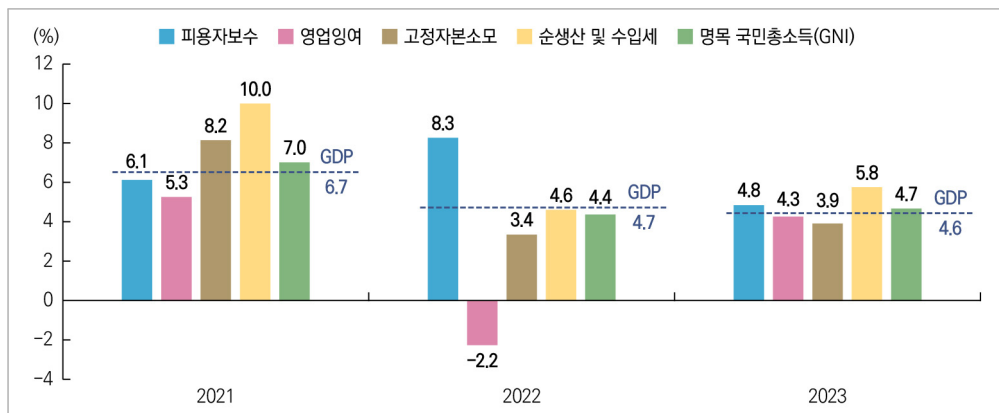
- 영업잉여는 2022년에는 -2.2% 감소하고 2023년에는 4.3% 상승
 - 2022년에는 고용호조로 인해 피용자보수가 증가하여 영업잉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잉여 비중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영업잉여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한 잔차로 구함

5. 국민총소득(GNI)

□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22년 4.4%, 2023년 4.7%로 전망

- 국민총소득은 2022년에는 명목GDP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4.4% 성장률을 나타내며, 2023년에는 GDP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자본시장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국외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중 국외수취자본소득의 감소에 기인

[2023년 국민총소득 및 분배GDP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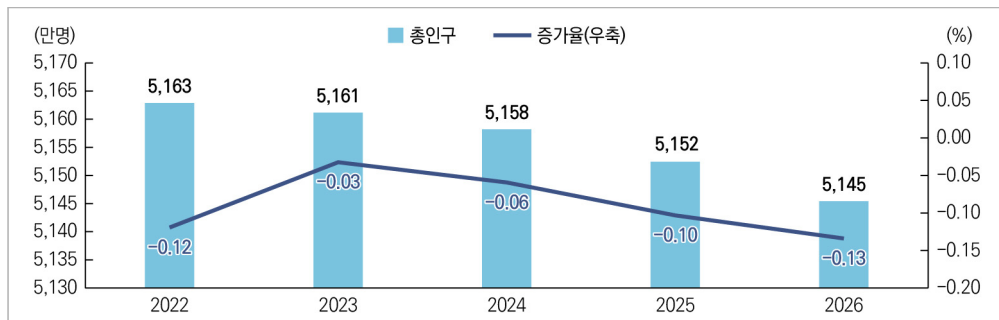
III. 인구·고용 전망

1. 인구

□ 2022~2026년 인구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영향으로 2022~2026년 기간의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0.11%씩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6명에서 2026년 0.6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대여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규모의 증가로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전망
- (상방요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확대
- (하방요인) 저출산 지속, 사망자 수 증가, 국제인구 순유출 증가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2~2026년)]



2. 고용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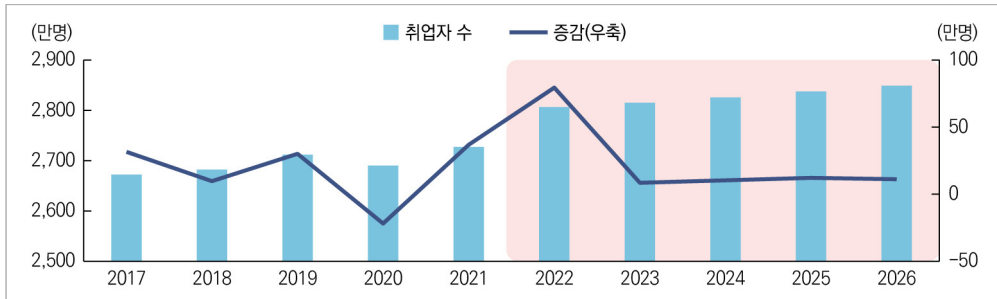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23년부터 증가세 둔화

- 취업자 수는 2022년 79.5만명(2.9%), 2023년 8.6만명(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존 GDP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후 취업자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2023년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
- 2024~2026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만명 초반대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방요인)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 지속

- (하방요인) 2022년 고용호황의 기저효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및 전망]



주: 음영 부분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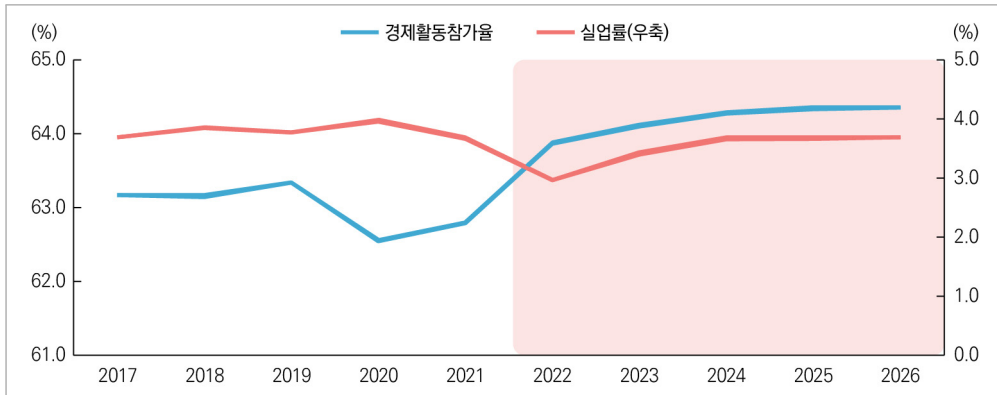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큰 폭 상승 후, 2023년부터 완만한 상승세 지속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 2023년 6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고용호황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큰 폭(전년대비 1.1%p)으로 상승
 - 2023년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가 둔화되어 64.1%(전년대비 0.2%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6년 64.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고령층 등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상승

□ 실업률은 2022년 3.0% 기록 후 점차 상승하여 3.7%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 실업률은 2022년 3.0%, 2023년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로 실업률은 전년대비 0.7%p 하락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3년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실업률은 3.4%(전년대비 0.4%p)로 상승
- 2024~2026년 동안 실업률은 3.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변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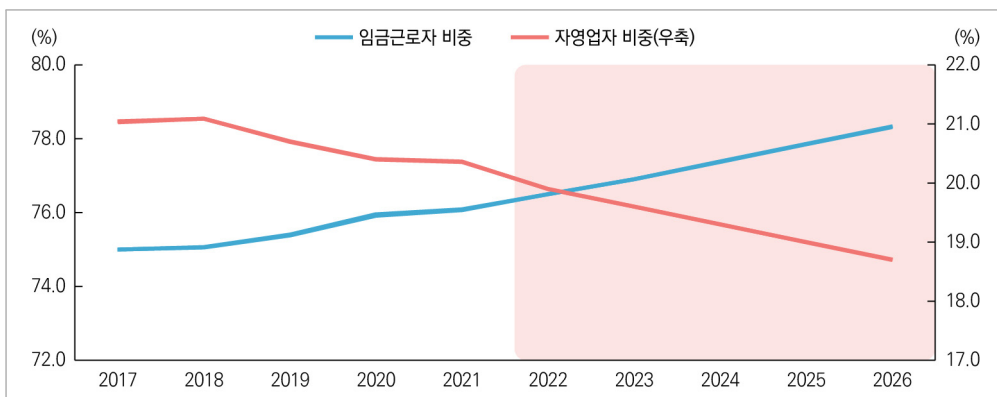


주: 음영 부분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 상승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 하락 전망

- 2022~2026년 기간 동안 평균 임금근로자 비중은 77.4%, 자영업자 비중은 19.3%가 될 것으로 전망
 -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존의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1년 76.1%에서 2026년에 78.3%로 상승
 - 자영업자 비중은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2021년 20.2%에서 2026년 18.7%로 하락
 -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21년 3.7%에서 2026년 3.0%로 하락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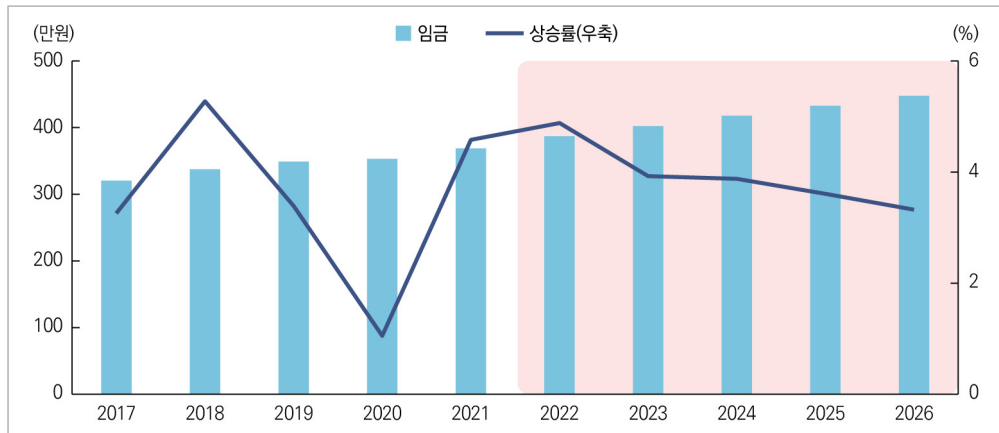
주: 음영 부분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3. 임금상승률 전망

□ 임금은 2022년 4.9%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점차 상승률 하락 전망

- 임금상승률은 2022년 4.9%, 2023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임금은 GDP상승률을 초과하는 취업자 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9% 상승
 - 2023년 임금은 GDP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여 상승세 둔화
- 2024년 임금은 전년대비 3.9% 상승하지만 이후 임금상승률은 지속 하락하여 2026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방요인) 노동생산성 상승,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지속
- (하방요인) 경제성장률 하락

[임금 수준 및 상승률 변화 추이 및 전망]



주: 음영 부분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차 례

[제 I 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구조]

제1장 국민소득 / 3

제1절 개요	3
제2절 분배국민소득의 구조	4
제3절 국민총소득 전망의 의의	5

제2장 분배 부문별 동향 / 6

제1절 분배국민소득 동향	6
제2절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12
제3절 국민총소득 국제 비교	14

제3장 인구 및 고용 동향 / 16

제1절 인구 동향	16
제2절 고용 동향	21

[제 II 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전망]

제1장 피용자보수 / 29

제1절 현황	29
제2절 2023년 전망	30

제2장 고정자본소모 / 35

제1절 현황	35
제2절 2023년 전망	36

제3장 순생산 및 수입세 / 40

제1절 현황	40
제2절 2023년 전망	41

제4장 영업잉여 / 43

제1절 현황	43
제2절 2023년 전망	46

제5장 국민총소득(GNI) / 50

제1절 현황	50
제2절 2023년 전망	53

[제 Ⅲ 부 인구·고용 중기 전망]

제1장 인구 / 59

제1절 중기 전망	59
제2절 인구변동요인	61

제2장 고용량 / 68

제1절 2023년 전망	68
제2절 중기 전망	82
제3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89

제3장 임금상승률 / 91

제1절 2023년 전망	91
제2절 중기 전망	94

참고문헌 / 96

BOX 차례

[BOX 1] 노동소득 분배율과 피용자보수 분배율	33
[BOX 2] 고정자본소모란	38
[BOX 3]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율의 국제비교	39
[BOX 4] 영업잉여와 영업이익	48
[BOX 5] 합계출산율 전망 비교	63
[BOX 6] 202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검토	73
[BOX 7]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기여도 분석	75

표 차례

[제 I 부]

[표 I-1] 분배국민소득의 구성	4
[표 I-2] 국민총소득과 GDP	5
[표 I-3]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소득 비교	9
[표 I-4] 주요국 취업자 증가율	22
[표 I-5] 국내 취업자 증가율	24

[제 II 부]

[표 II-1] 피용자보수 주요 결정요인 전망치	31
[표 II-2] 명목 총고정자본형성	35
[표 II-3] 2022년 상반기 국민총소득 현황	51
[표 II-4]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전망치	54

[제 III 부]

[표 III-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최근 동향	69
[표 III-2]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최근 동향	72
[표 III-3] 임금 최근 동향	91

그림 차례

[제 I 부]

[그림 I-1] 분배국민소득 구성의 변화	6
[그림 I-2] 임금근로자수 및 명목임금지수 변화	7
[그림 I-3] 기업영업이익 및 자영업자 비중	8
[그림 I-4] 자산소득 변화	10
[그림 I-5]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 분류체계	11
[그림 I-6]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11
[그림 I-7]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2020년 기준)	12
[그림 I-8] 주요국의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13
[그림 I-9]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13
[그림 I-10]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민총소득	14
[그림 I-11] 국외순취요소소득 증가율	14
[그림 I-12] OECD 국가별 1인당 GNI와 1인당 GDP(2020년)	15
[그림 I-13] UN 전세계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 전망	16
[그림 I-14] 대륙별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전망	17
[그림 I-15] 소득수준별 인구 변화 전망	18
[그림 I-16] 세계와 한국의 인구 전망 비교	19
[그림 I-17]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추이	19
[그림 I-18]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20
[그림 I-19]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취업자 수 변화 추이	22
[그림 I-20]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률 변화 추이	23
[그림 I-21] 코로나19 이후 국내 취업자 수 변화 추이	23
[그림 I-22] 코로나19 이후 국내 실업률 추이	24

[제 II 부]

[그림 II-1] 피용자보수 및 명목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29
[그림 II-2]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31
[그림 II-3]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32
[그림 II-4] 명목GDP와 고정자본소모 추이(1980~2021)	36
[그림 II-5]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37
[그림 II-6]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37
[그림 II-7]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40
[그림 II-8]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42
[그림 II-9]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42
[그림 II-10]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43
[그림 II-11] 법인·비법인·상장사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교	44
[그림 II-12] OECD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45
[그림 II-13] 법인영업잉여 결정요인	47
[그림 II-14]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47
[그림 II-15] GNI 및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비중	50
[그림 II-16]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52
[그림 II-17]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53
[그림 II-18]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결정요인	54
[그림 II-19] GNI 증가율 전망	55
[그림 II-20] 1인당 GNI 증가율 전망	55

[제 Ⅲ 부]

[그림 Ⅲ-1]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2~2026년)	60
[그림 Ⅲ-2] 월별 혼인 추이	61
[그림 Ⅲ-3] 출생아 수(2010~2021년)	62
[그림 Ⅲ-4]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62
[그림 Ⅲ-5] 월별 사망 추이(2019~2022년)	64
[그림 Ⅲ-6] 사망자 수 추이(2010~2021년)	65
[그림 Ⅲ-7] 기대여명 전망	65
[그림 Ⅲ-8] 연간 내·외국인 국제이동 추이	66
[그림 Ⅲ-9] 국제인구 순유입 추이(2010~2021년)	67
[그림 Ⅲ-10]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	67
[그림 Ⅲ-11] 취업자 수 증감 및 고용률 월별 추이	69
[그림 Ⅲ-12] 산업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추이	70
[그림 Ⅲ-13] 연령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및 고용률 추이	71
[그림 Ⅲ-1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71
[그림 Ⅲ-15]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월별 추이	72
[그림 Ⅲ-16] 세계 교역량 추이 및 전망	78
[그림 Ⅲ-17] 자산가격 및 금리 변동 추이	79
[그림 Ⅲ-18]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및 직접일자리 규모	79
[그림 Ⅲ-19] 빈 일자리 및 외국인력 체류규모 추이	80
[그림 Ⅲ-20] 중기 취업자 수 증감 전망	83
[그림 Ⅲ-21] 중기 고용률 전망	84
[그림 Ⅲ-22] 고령층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85
[그림 Ⅲ-23] 중기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85
[그림 Ⅲ-24] 중기 실업률 전망	86
[그림 Ⅲ-25] 고용지표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7
[그림 Ⅲ-26] 취업자 수 증감 예측치	88
[그림 Ⅲ-27]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	88
[그림 Ⅲ-28] 실업률 예측치	88
[그림 Ⅲ-29] 중기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90
[그림 Ⅲ-30]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 예측치	90
[그림 Ⅲ-31] 임금 변화 추이	92

[그림 Ⅲ-32]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 분해	92
[그림 Ⅲ-33] 산업별 임금 변화 추이(2022년 상반기)	93
[그림 Ⅲ-34]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94
[그림 Ⅲ-35] 임금상승률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95
[그림 Ⅲ-36] 임금상승률 예측치	95

국회에산정책처



제 I 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구조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제 I 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구조

제1장 국민소득



제1절 개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시계열 변화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따른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해 국민경제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생산과 소득분배, 지출의 측면에서 측정하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측정방법에 따른 국민소득은 동일하다. 이러한 국민소득을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으로 부른다. 월별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분기별로 발표되어 가장 빠르게 경제상황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분배국민소득은 한 해의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에 분배된 현황을 기록하므로 분기별 소득 구분은 하지 않고 연간 통계로만 발표된다. 따라서 경제전망에서도 분배국민소득은 사후 통계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소득 분배를 파악할 수 있는 소득지표의 중요성이 크다. 소득은 삶의 질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OECD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새로운 정책체계로 설정하면서 경제주체 간 소득 분배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고려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하였다.¹⁾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전망부터 국민 개인의 소득수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분배국민소득과 국민총소득(GNI), 1인당 국민총소득, 인구와 고용 전망을 통해 국민소득통계 전망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 OECD,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2018

제2절 분배국민소득의 구조

분배국민소득은 소득접근법을 이용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분배국민소득의 구성요소는 한 해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과 기업, 고정자본, 정부에 분배된 현황을 보여준다.

노동이 생산에 참여하고 받은 몫은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로 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생산자본은 생산활동에 소비되거나 마모되는데, 이를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부른다. 정부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생산물세 및 수입세를 부과하며 시장가격 GDP에 반영되므로 이를 생산활동에서 정부의 몫으로 본다. 이처럼 총부가가치에서 노동과 자본, 정부의 몫을 제한 나머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분배된 몫으로 보며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분배국민소득 전망은 재정당국에도 중요한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다. 분배국민소득의 구성요소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과세표준 전망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피용자보수 전망을 통해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의 몫으로 분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잉여는 일관성 있는 총량지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세 과세표준 전망에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과 인구 전망은 주요 경제지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의 기초자료가 되며 임금근로자 수는 장기 소득세 납세자 수 전망에 활용될 수 있다. 인구전망은 출산율 전망에 기초하여 1인당 소득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표 1-1] 분배국민소득의 구성

분배국민소득	내역	분배된 소득의 지출
피용자보수	임금 및 급여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경상세(정부), 민간소비, 저축(투자)
영업잉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잉여	이자·배당·임료(가계), 경상세(정부), 저축(투자)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분	내부적립(자본)
순생산 및 수입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정부소비, 이전지출(가계), 저축(투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절 국민총소득 전망의 의의

분배국민소득이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순소득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따라서 국민총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를 총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 개인의 구매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이다.

즉, 안정적인 가계 소득의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경제 주체 내 분배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국민총소득은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민총소득에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거래뿐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외거래도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 1-2] 국민총소득과 GDP

•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text{GNI(명목)} = \text{GDP(명목)}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명목)}$$

구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분배국민소득(GDP)					
국민총소득(GNI)					
국민소득(NI)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생산과 지출접근법을 이용한 GDP가 가치의 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연도로 가치를 고정된 실질 통계를 이용하여 변화율을 산정하는데, 분배국민소득은 당해연도 부가가치의 분배에 의미가 있으므로 명목가만 이용한다. 이에 본고의 분배국민소득 전망도 모두 명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분배 부문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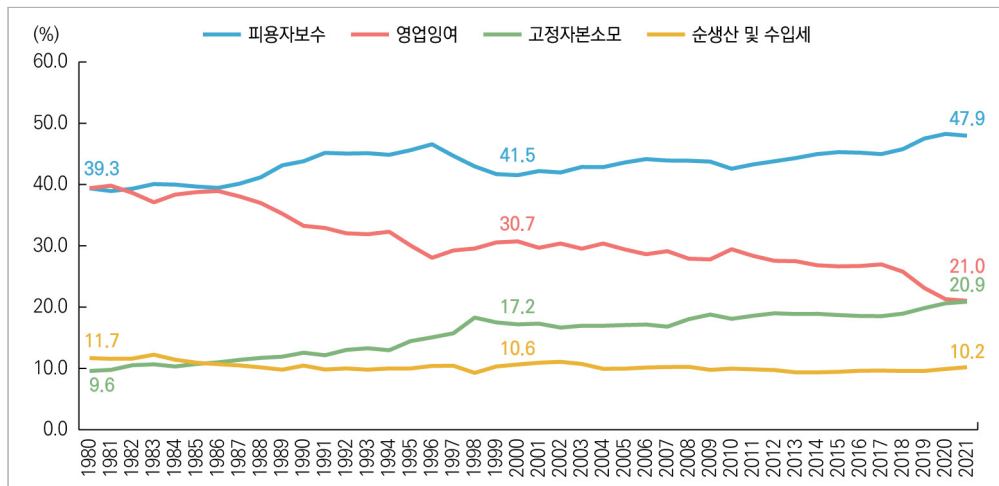


제1절 분배국민소득 동향

-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 노동 소득 비중
임금 및 급여,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소득 비중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잉여

분배국민소득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경제주체에 배분되는 몫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구성비의 변화를 주요 동향으로 검토한다. 1980년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이 각각 39.3%와 39.4%로 유사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영업잉여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1-1] 분배국민소득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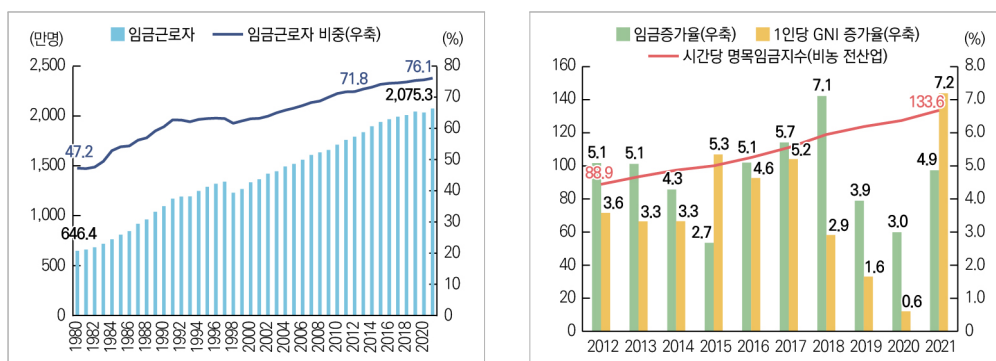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980~2021년 기간 피용자보수는 39.3%에서 47.9%로 8.6%p 증가하였고, 영업잉여는 39.4%에서 20.9%로 18.5%p 감소하였다. 동 기간, 고정자본(fixed capital)에 분배된 소득인 고정자본소모도 9.6%에서 21.0%로 11.4%p 증가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하는 순생산 및 수입세는 11.7%에서 10.2%로 1.5%p 감소했다.

피용자보수의 비중 증가는 경제활동의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 임금근로자는 646만명에서 2021년에 2,281만명으로 2.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가 1,368만명에서 2,727만명으로 1.1배 증가한 데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47.2%에서 76.1%로 상승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명목임금 상승도 피용자보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2012년 이후 국민소득은 43.9% 상승한 데 비해, 농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명목임금지수는 2012년 88.9에서 2021년 133.6으로 50.3% 증가하였다. 명목임금지수 상승률을 1인당 GNI 성장률과 비교해도 10년 중 8년 동안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동 기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2년 71.8%에서 2021년 76.1%로 4.3%p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영향을 주었다.

[그림 1-2] 임금근로자수 및 명목임금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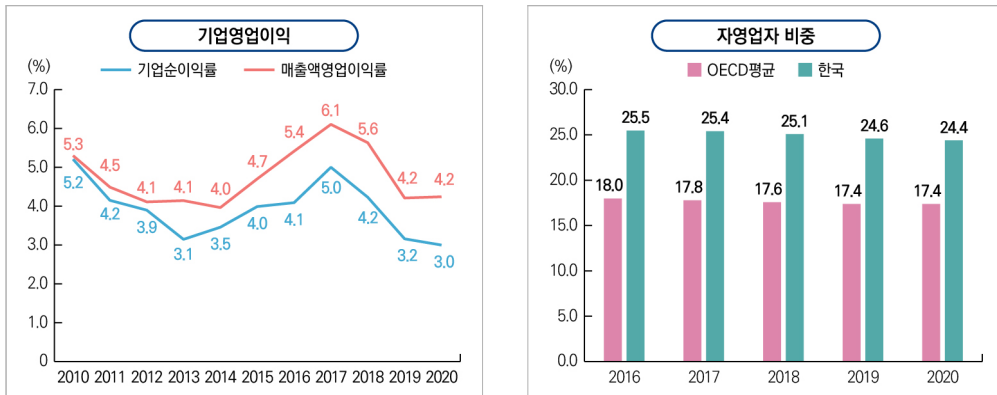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영업잉여 비중은 장기 추세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제조업 및 금융 기업의 수익성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전이익을 의미하며 이때

기업은 제조업 기업뿐 아니라 금융 및 보험 기업, 기업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를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에 속하는데, 최근 10년 추세를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28.3%에서 2021년 24.4%로 3.9%p 감소했다.²⁾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영업잉여에 포함되던 혼합소득이 피용자보수로 변경되므로 영업잉여의 감소 원인이 된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최근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의 수익성은 최근 하락 추세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4.5%에서 2020년 4.2%로 0.3%p 하락했다. 또한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인 기업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의 종합적인 최종성과를 나타내는데 2011년 4.2%에서 2020년 3.0%로 순이익률의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기업영업이익 및 자영업자 비중



주: 기업경영분석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다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 변화는 노동과 기업의 이익 배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생산활동에 참여한 경제주체인 가계와 자본, 기업의 구성비도 바뀌었고, 영업잉여는 노동의 몫도 일부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피용자보수는 모든 경제주체의 노동소득만을 포함하므로 피용자보수는

2) 소득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별도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고용통계를 이용하여 추세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본고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기준을 적용한다.

노동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피용자보수가 전체의 노동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영업잉여에 포함된다.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을 포함한 혼합소득을 포함한다.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영업잉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하거나 0에 가깝기 때문에 영업잉여는 법인(기업)과 가계(자영업자)의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일 뿐 아니라 소득도 생산과 경영, 투자활동 등 노동소득을 제외한 기업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영업잉여는 포괄범위가 큰 소득이다.

[표 1-3]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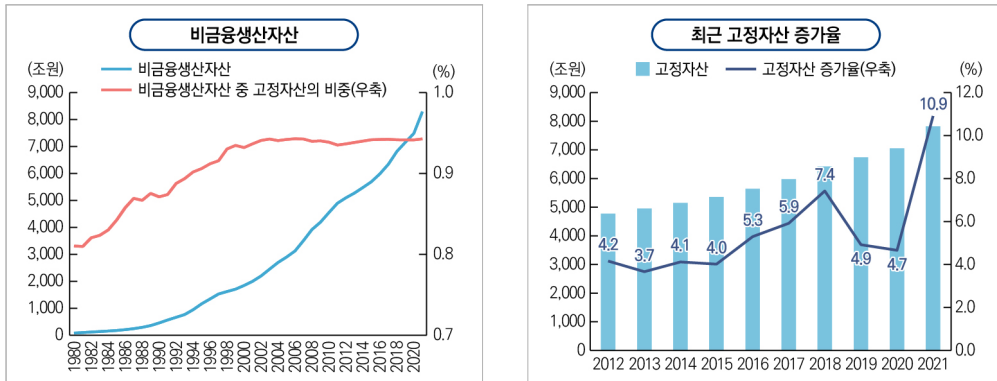
소득발생계정	법인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피용자보수	노동소득	노동소득	노동소득	노동소득
영업잉여	자본소득 혼합소득	△	혼합소득	△

주: △는 미미하다(또는 0)는 의미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고정자본소모는 한 해의 생산활동에 이용된 고정자본의 가치를 의미하므로 생산활동이 자본 집약적으로 될수록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되면서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금융생산자산 중 고정자산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자산스톡은 198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금융생산자산 중에서도 고정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은 비금융생산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1980년 81.0%에서 2000년 이후에는 9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금융생산자산의 생산 투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정자산은 2000년 이전에는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 5년 동안에도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4] 자산스톡 변화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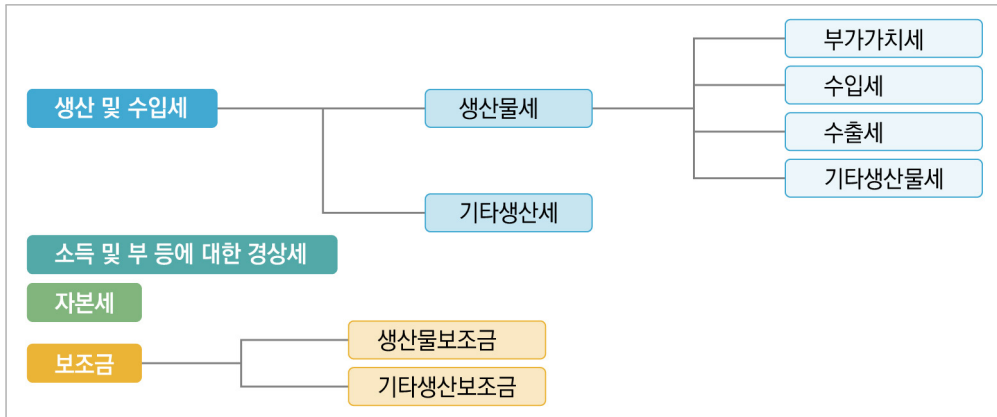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³⁾에서 보조금(subsidies)⁴⁾을 제한값으로 생산활동에서 정부에 분배된 몫으로 볼 수 있는데,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1980년 11.7%에서 2021년 10.2%로 1.5%p 감소하였다.

세금은 순생산 및 수입세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와 자본세의 비중이 증가하며 간접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4) 보조금(subsidies)은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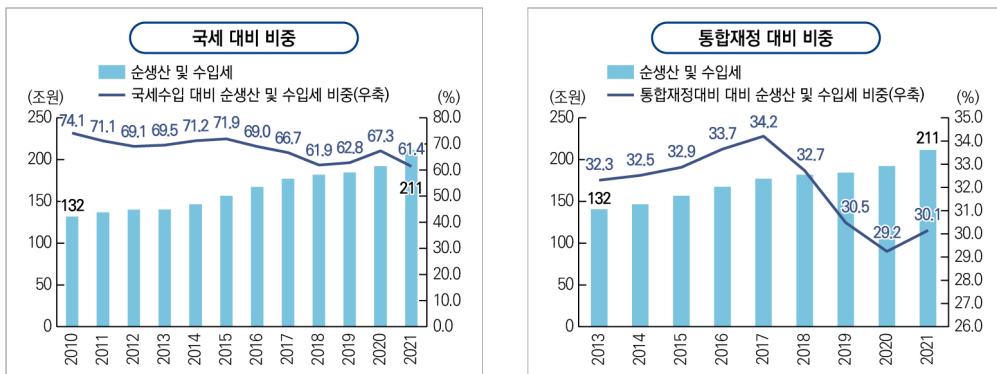
[그림 1-5]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 분류체계



자료: 한국은행

순생산 및 수입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4.1%에서 2021년 61.4%로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2.3%에서 2021년 30.1%로 소폭 낮아졌다.⁵⁾ 정부 재정지출이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입은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와 자본세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1-6]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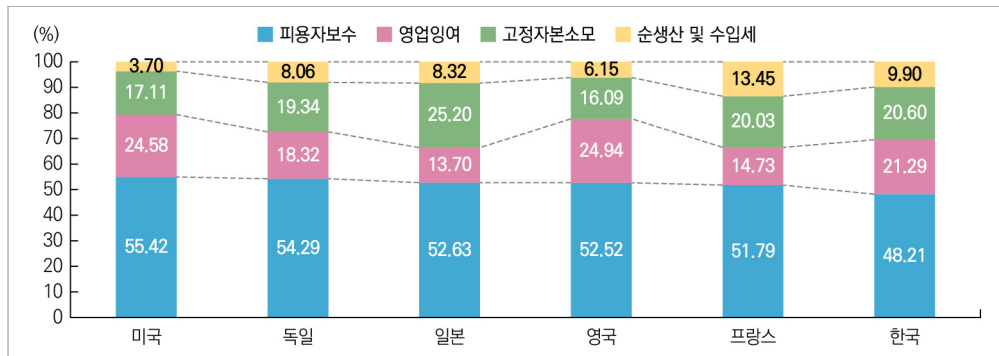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5) 순생산 및 수입세는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합재정 대비 비중을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교이다.

제2절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2020년 기준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48.2%)이 가장 작고 고정자본소모(20.6%)와 순생산 및 수입세(9.9%), 영업잉여(21.3%)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이 작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미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55.4%로 높으면서도 영업잉여가 24.6%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피용자보수 비중이 높은 54.3%인데, 영업잉여는 18.3%로 낮은 편이다. 일본도 피용자보수가 52.6%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고정자본소모도 25.2%로 높은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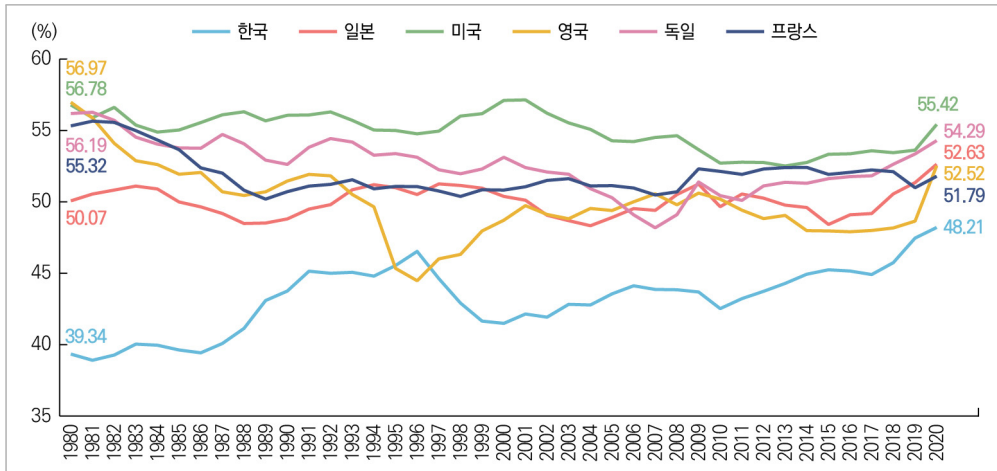
[그림 1-기]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2020년 기준)



주: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발표하는 국가의 경우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산정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을 장기 시계열로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분배국민소득의 변화가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장기추세로는 하향이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상승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독일의 피용자보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 비중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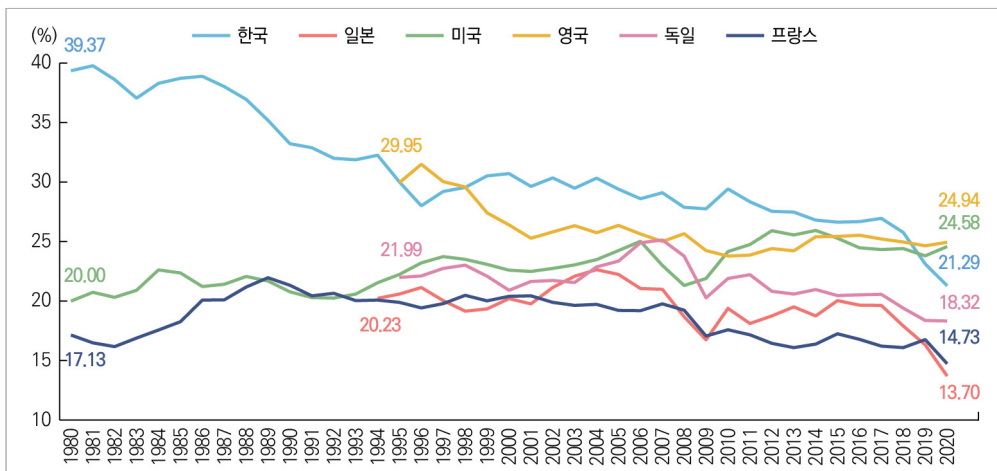
[그림 1-8] 주요국의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인 영업잉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하락률이 높았다.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그 이전에도 점진적인 하락추세가 있었다. 영업잉여의 감소와 피용자보수 비중의 증가를 기업 대비 노동의 몫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용자보수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영업잉여는 자영업자와 자본의 몫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산업구조와 자산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9]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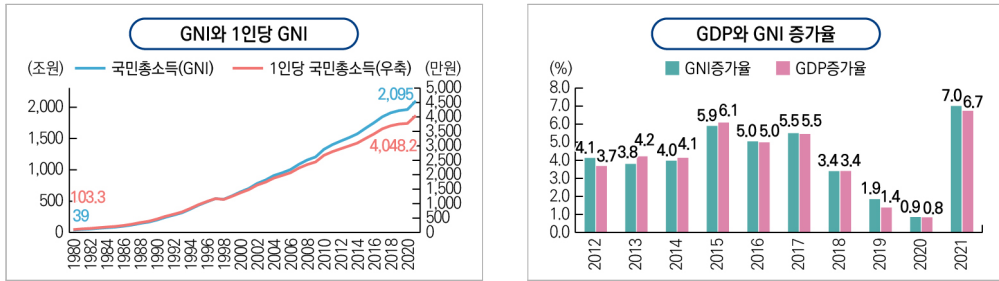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

제3절 국민총소득 국제 비교

국민총소득은 명목GDP와 유사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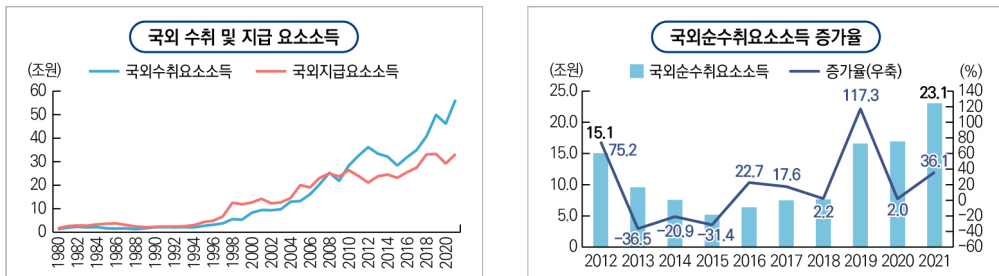
[그림 1-10]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민총소득



자료: 한국은행

GDP와 GNI의 차이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만 나타나는데, 최근 3년 동안 국외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외요소소득은 지출국민소득에서 순수출의 비중이 수출과 수입 각각의 값보다 크게 작은 것과 유사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지불한 소득의 차이만 고려하므로 각각의 수준 값보다 수취는 작은 값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자본의 국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지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도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지표로 국외요소소득의 중요도도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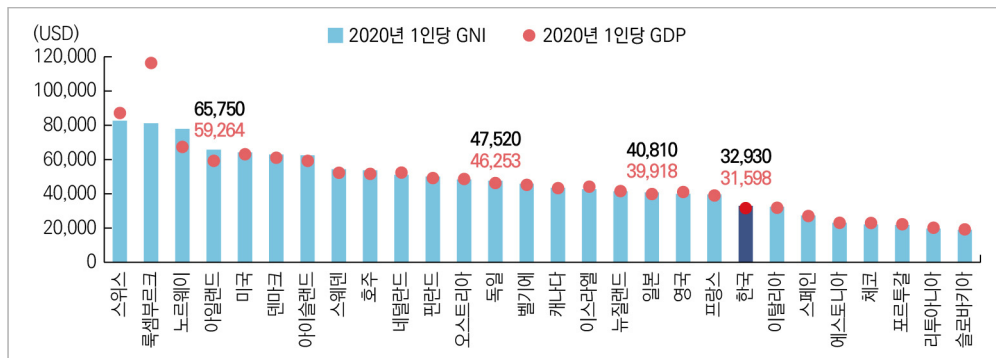
[그림 1-1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1인당 GNI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구매력을 파악하는 데 쓰이므로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를 이용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2,930달러(명목)로 OECD 중 21위였다. 이는 1인당 GDP 순위인 24위보다 다소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일본의 1인당 GNI는 40,810달러이고 GDP는 39,918달러였다.⁶⁾

[그림 1-12] OECD 국가별 1인당 GNI와 1인당 GDP(2020년)



주: 2020년. 명목.
자료: WorldBank

6) 아일랜드는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다국적 기업이 많으며, 외국인 소유 기업의 대규모 지적 재산권 자산과 임대 항공기의 대규모 자산 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산 보유로 인해 생산된 가치의 대부분이 국외 유출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내수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국민소득(GNI) 경제통계의 왜곡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대안적 통계(수정 GNI)를 작성하고 있다.

제3장 인구 및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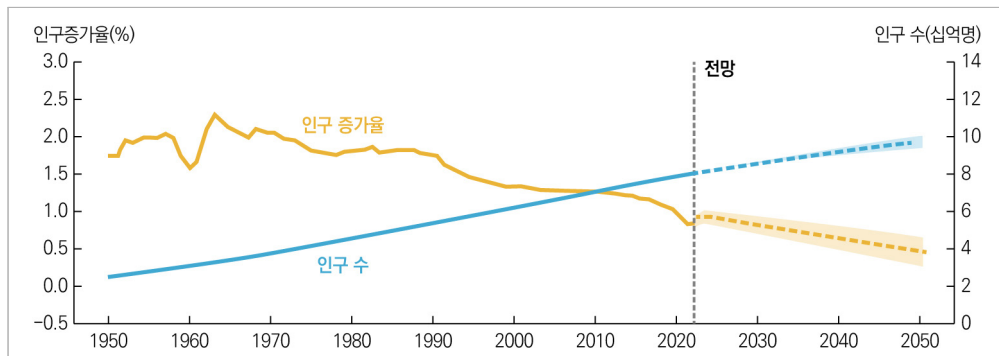


제1절 인구 동향

- **인구변동요인** = 출산, 사망, 국제이동
 - 한 국가의 인구 규모는 출산, 사망, 국제이동에 의해 결정되는데, UN 인구전망에 따르면 인구 규모는 증가하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이
 -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3만 달러 이상)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합계출산율 2.1명)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구이동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인구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다. UN의 인구전망(2022)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규모는 2021년 약 79.1억명에서 2050년 97억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증가율은 둔화되어 2020년부터 1%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50년까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⁷⁾

[그림 1-13] UN 전세계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 전망



자료: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김상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6788-4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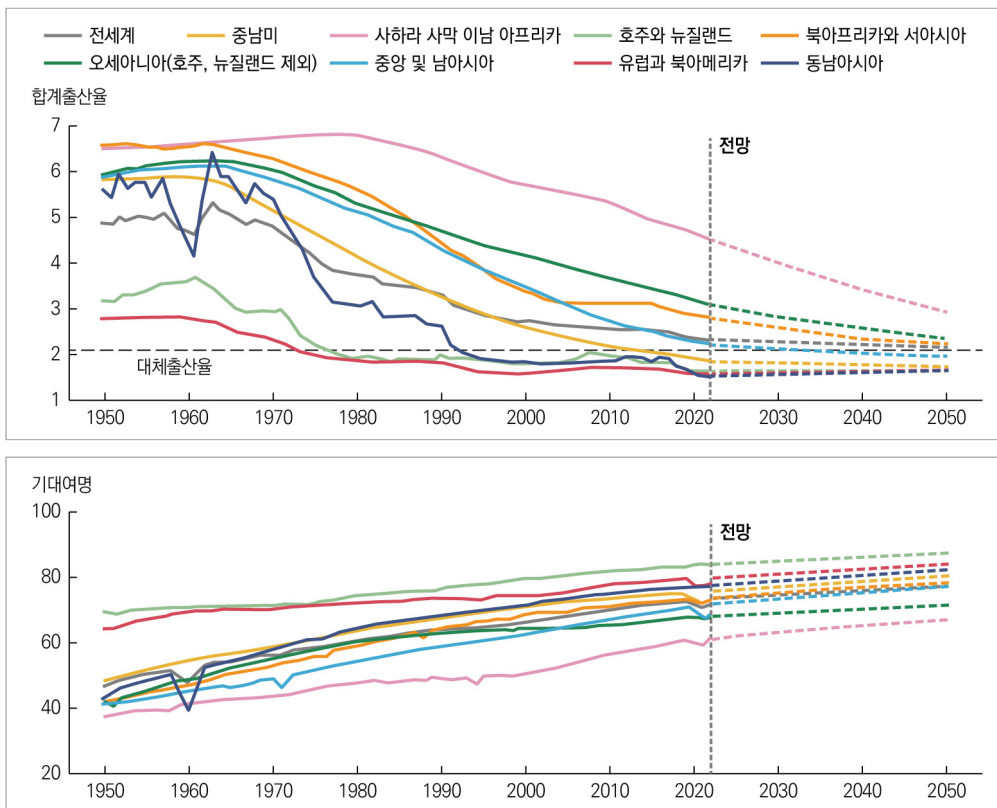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7) UN(2022)

한 국가의 인구 규모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증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 세계 인구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전 세계 기대수명은 1990년 약 63세였으나, 2019년 72.8세(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1.0세로 하락)에 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평균수명이 약 77.2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⁸⁾ 반면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1990년 3.3명에서 2021년 2.3명, 2050년 2.1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4] 대륙별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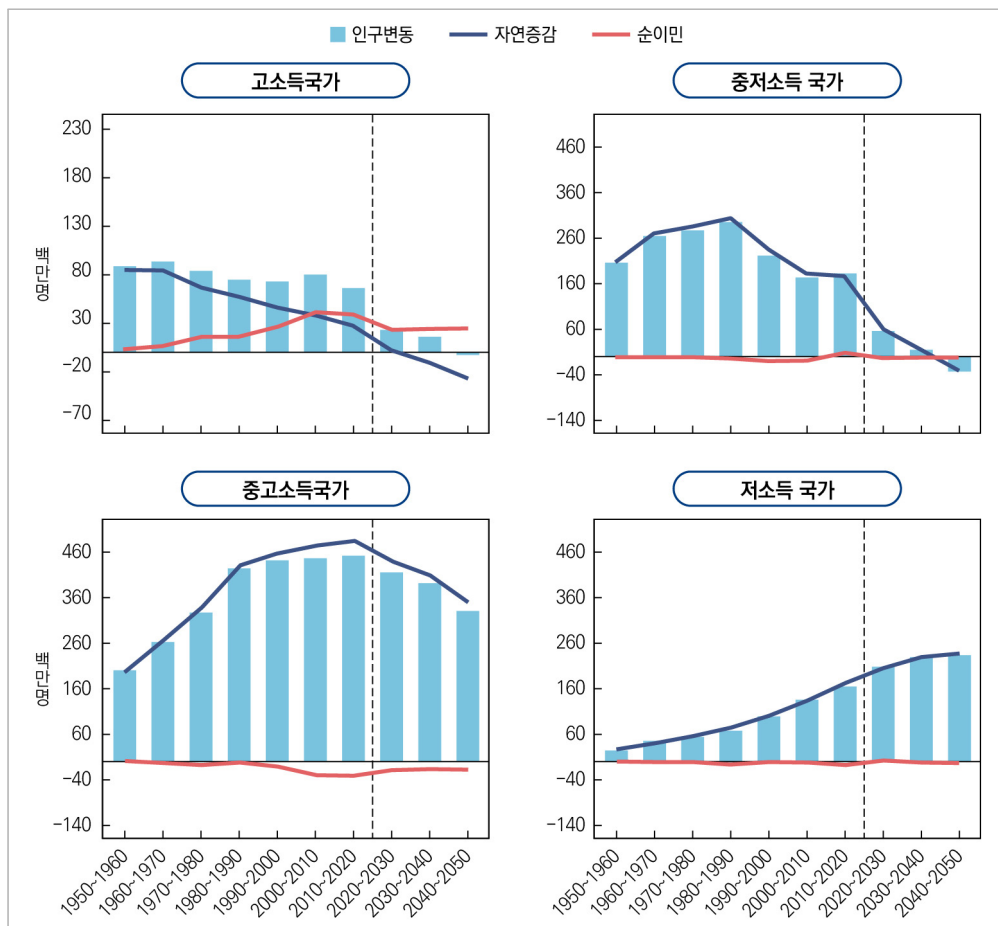


자료: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8) 전 세계 평균적인 기대수명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가별, 성별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21년 최빈국의 기대수명은 세계평균보다 7세 낮으며, 모든 대륙 및 국가별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의 남성 기대수명은 여성보다 7년 낮은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그 차이는 2.9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2022)

다만 국가별로 인구변동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저소득 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양(+)이므로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는 인구 자연감소(출생-사망이 음(-)인 경우)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순유입(이민 등)으로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과거 이민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았으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노력이 확대되는 등 인구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 이민이 인구변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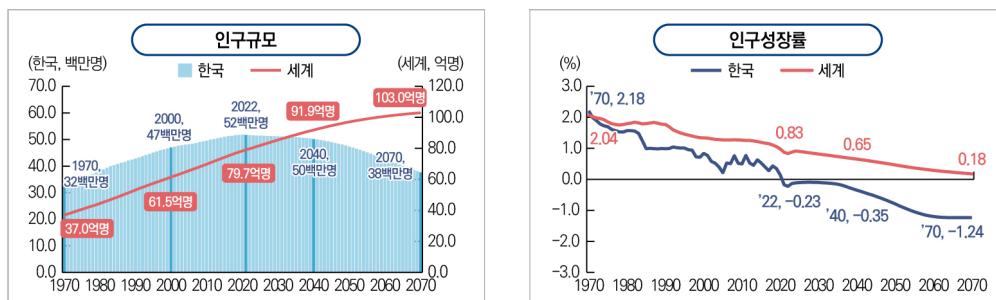
[그림 1-15] 소득수준별 인구 변화 전망



자료: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1960년 2,501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인구증가율은 1961년 2.97%에서 2020년 0.14%로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통계청(2021)은 202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음(-)으로 하락 전환하고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의 총인구를 3,800만명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들어선 반면 UN의 세계 인구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나 2070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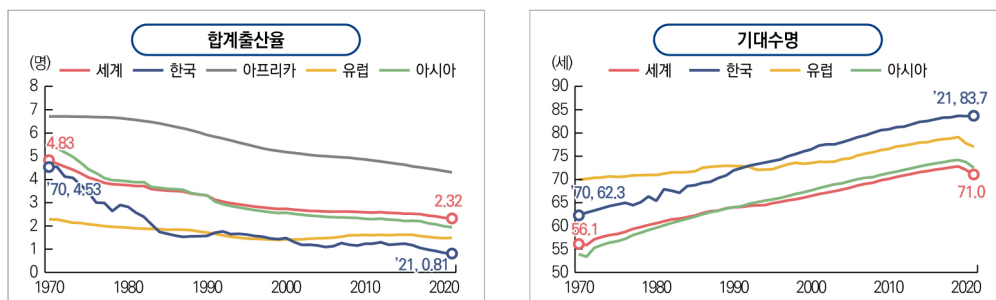
[그림 1-16] 세계와 한국의 인구 전망 비교



자료: 통계청(2022)

이러한 인구증가율 둔화 원인을 인구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출산율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2020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3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로 세계(72.0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⁰⁾

[그림 1-17]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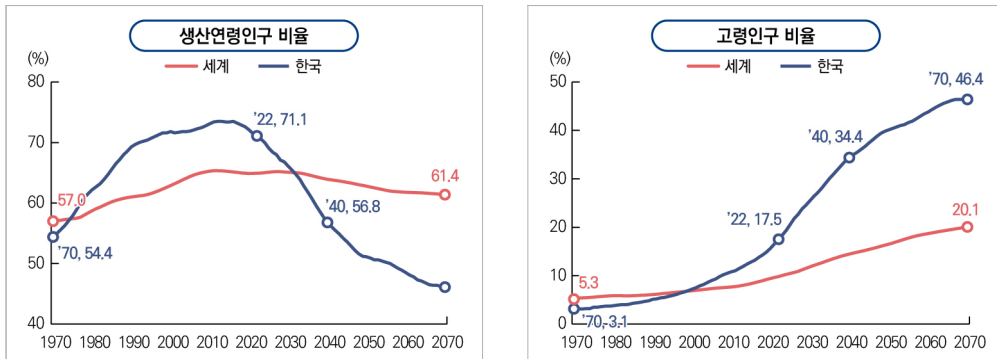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보도자료, 2021.12.9.

10)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2년(73.4%)을 정점으로 2040년 56.8%, 2070년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까지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7.5%에서 2070년에는 46.4%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세계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9.8%에서 2070년 2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의 고령화보다 훨씬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11)

[그림 1-18]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2022)

11)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제2절 고용 동향

- **주요국 고용**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서 점차 회복
 - 한국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으로 회복
 - 유로존 및 OECD 국가의 취업자 수는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복귀
 - 다만, 미국은 2022년 8월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일본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2022년 상반기 주요국 취업자 수**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양호한 상황
 - 특히, 한국 및 미국 등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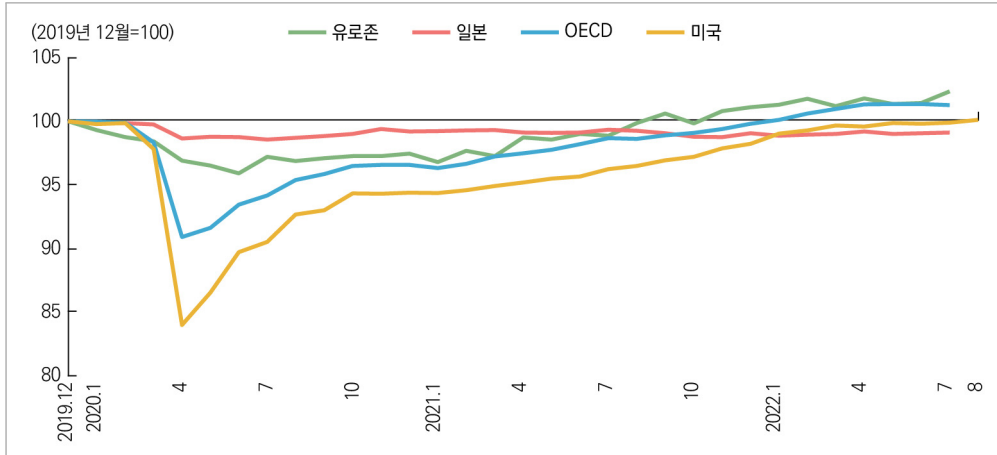
1. 해외 고용 동향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고용충격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주요국의 취업자 수 변화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이 크게 악화된 이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의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직전(2019년 12월)의 90.9%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전세계적 고용충격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직전의 84.0% 수준까지 떨어져 가장 높은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저점 이후 점차 고용이 회복되었고, 일부 주요국 고용시장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및 OECD의 취업자 수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직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가장 고용충격의 규모가 컸던 미국은 2022년 8월에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고, 일본의 고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취업자 증가세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기 대비 2.4% 증가하였다. 동 기간, 유로존 및 OECD 국가 취업자 수도 각각 1.3%, 1.9% 증가하였다.

[그림 1-19]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취업자 수 변화 추이



자료: OECD(2022),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표 1-4] 주요국 취업자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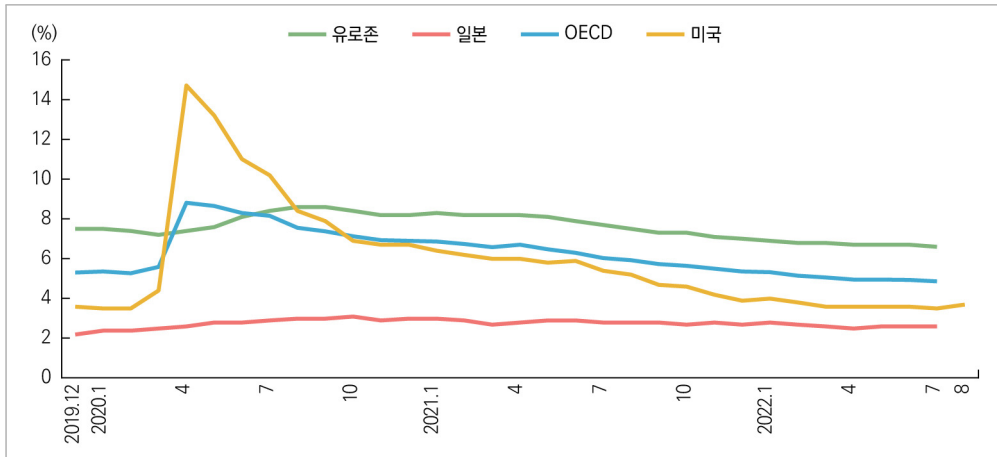
	미국	유로존	OECD	일본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율(%)	2.4	1.3	1.9	0.0

주: 계절조정 기준

자료: OECD(2022),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022년 상반기 기준, 실업률(계절조정) 또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022년 상반기 유로존 및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직전 대비 각각 0.7%p, 0.2%p 하락한 6.8%와 5.1%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두 국가 또한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2022년 상반기 실업률(계절조정): 미국 3.7%, 일본 2.6%).

[그림 1-20]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률 변화 추이(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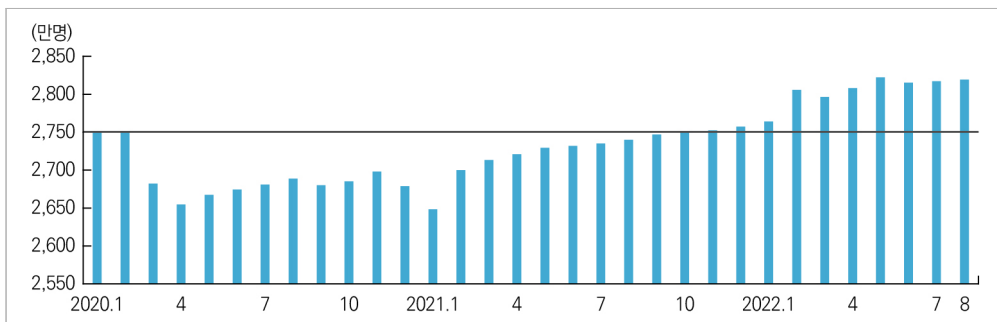


자료: OECD(2022),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 국내 고용 동향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충격이 발생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2020년 4월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1월)의 94.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다시 고용이 위축되며 2021년 1월 전고점의 96.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림 1-21] 코로나19 이후 국내 취업자 수 변화 추이(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또한, 2021년의 저점 이후 취업자 수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이 회복국면에 들어가며 2021년 상반기 취업자 수(계절조정)가 전기대비 0.8% 증가한 이후,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1.5%, 2022년 상반기 2.0%로 점차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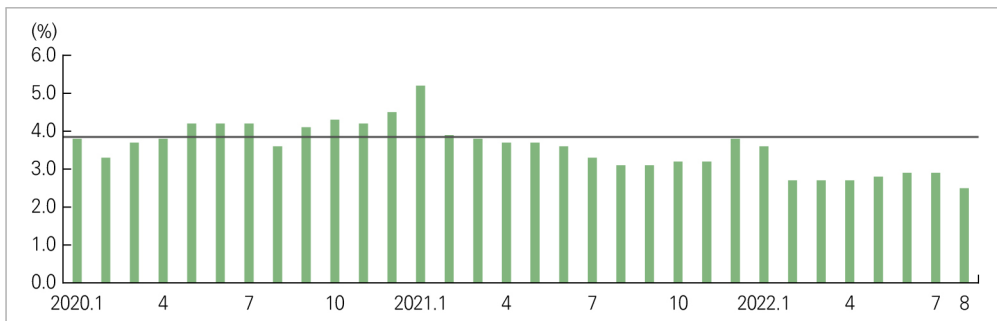
[표 1-5] 국내 취업자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국내 취업자 증가율 (%)	-0.4	0.8	1.5	2.0

자료: 통계청

국내 실업률(계절조정) 변화추이 또한 고용 상황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4월 이후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실업률(계절조정)은 2.9%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3.8%) 대비 약 0.9%p 하락하였다. 또한, 2022년 7~8월의 평균 실업률은 2.7%를 기록하여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림 1-22] 코로나19 이후 국내 실업률 추이(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국회에산정책처



제2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전망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제1부 국민총소득 및 분배 전망

제1장 피용자보수



제1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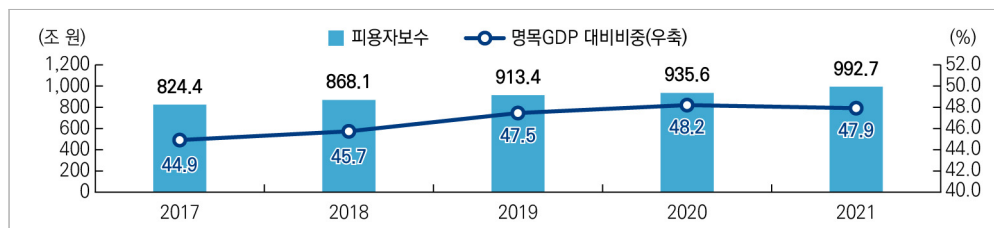
- 2021년 피용자보수는 992.7조원으로 GDP의 47.9%를 차지
 - 피용자보수는 지난 5년간 평균 4.8%의 속도로 증가
 - 동기간, GDP 대비 비중은 45.2%에서 47.9%로 상승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4.9	5.3	5.2	2.4	6.1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을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피용자보수는 992.7조원으로 전체 명목GDP의 47.9%를 차지하였다. 피용자보수 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용자보수는 2017년 824.4조원에서 2021년 992.7조원으로 이 전 간 연간 4.8%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피용자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추세적 상승을 보였다.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은 2017년 44.9%에서 2021년 47.9%로 상승하였다.

[그림 11-1] 피용자보수 및 명목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제2절 2023년 전망¹⁾

- 2023년 피용자보수는 전년(8.3% 전망)보다 3.5%p 낮은 4.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6.1	8.3	4.8	4.8	6.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물가 연쇄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률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상승률 둔화 • 임금근로자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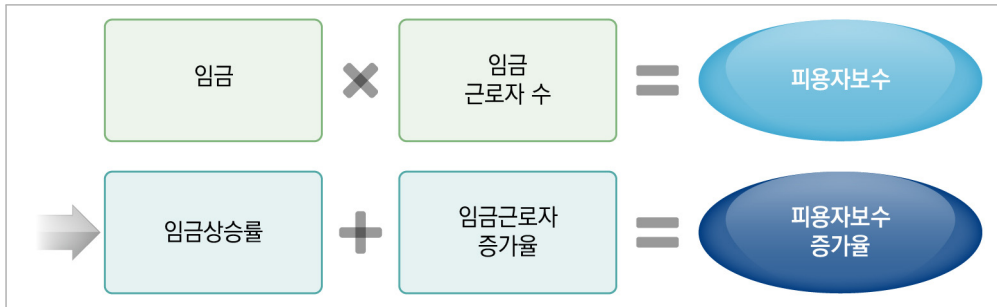
2022년 중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8.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6.1%) 및 지난 5년간(2017~2021년)의 증가율(4.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2022년 고용 호황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금도 4.9%라는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제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 임금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명목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7.9%에서 2022년 49.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3.5%p 하락한 수치이다. 2023년 경제성장률 둔화 및 2022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로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임금상승률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2022년 4.9%에서 2023년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물가상승률이 추후에 임금에 반영된다면, 임금상승률이 확대되어 피용자보수 증가율 또한 상승할 수 있다.

1) 생산활동의 결과 중 임금근로자에 분배되는 몫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소득분배 관련 정책 및 근로소득세 세수 총액 추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고용전망을 통해 도출된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²⁾ 피용자보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곱으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³⁾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2]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통계청

고용전망을 통해 도출된 2022년 및 2023년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1] 피용자보수 주요 결정요인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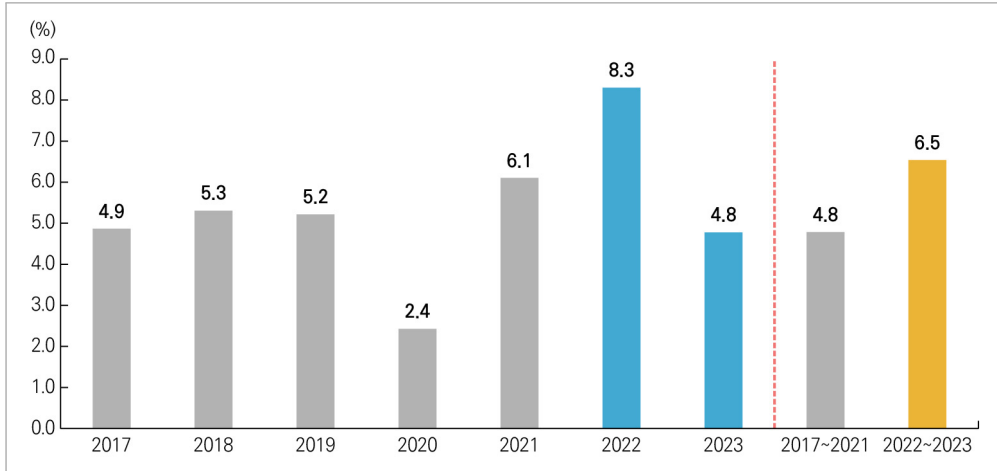
	2022	2023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3.4	0.8
임금상승률	4.9	3.9

주: 임금근로자 및 임금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제2장 고용량 및 제3장 임금상승률 파트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에 대한 상세 내용은 III부 2~3장에서 후술한다.
3)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의 곱을 더하기 관계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다음의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피용자보수} &= \text{명목임금} \times \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ln(\text{피용자보수}) &= \ln(\text{명목임금}) +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Delta \ln(\text{피용자보수}) &= \Delta \ln(\text{명목임금}) + \Delta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text{피용자보수 증가율} &= \text{명목임금상승률} + \text{임금근로자 증가율} \end{aligned}$$

[그림 11-3]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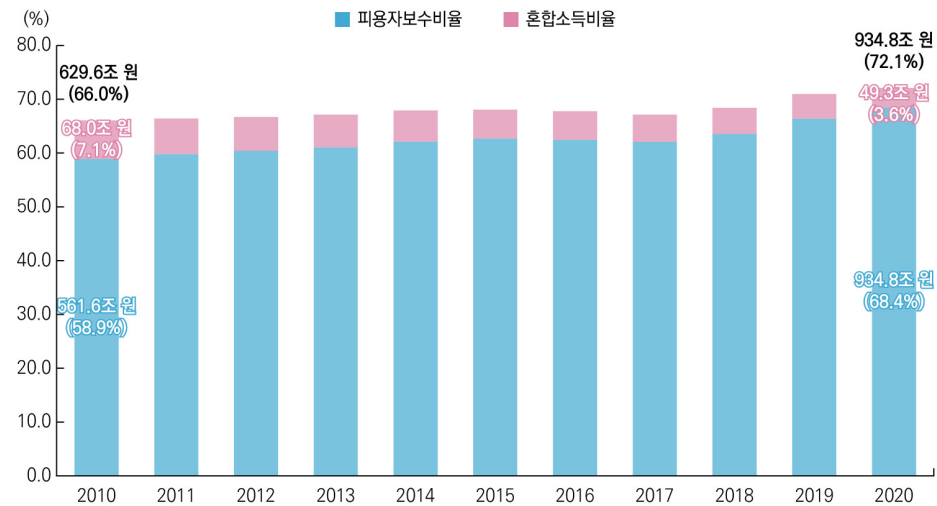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1] 노동소득 분배율과 피용자보수 분배율⁴⁾⁵⁾

-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노동소득의 일부만을 반영한다는 비판 존재**
 -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개념적 정의가 명확함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 하지만, 국내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과정에서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노동소득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식 =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
 -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추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모든 소득이 영업잉여로 포함⁶⁾
 -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식의 분자인 피용자보수가 노동소득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
 - 또한, 자본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에 포함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 **한국은행은 새로운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발하여 공표할 계획**
 - 2022년 6월 30일부터 한국은행은 기존 노동소득 분배율을 피용자보수 비율로 용어 변경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반영, 고정자본소모의 자본소득 포함 여부 등
- **국내 피용자보수 비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 상승 지속**
 - ※ 기존 노동소득 분배율을 의미하며 산식은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
 - 피용자보수는 2010년 561.6조원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934.8조원을 기록하며 373.2조원(66.5%) 증가

- 피용자보수 비율은 2010년 58.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68.4%로 상승
-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가정하여 살펴보아도 최근 10년간 노동에 분배되는 비중은 상승
 -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혼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6.0%에서 2020년 72.1%로 약 6.1%p 상승
 - 다만, 혼합소득의 비율은 2010년 7.1%에서 2020년 3.6%로 감소

[피용자보수 비율 및 혼합소득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4) 한국은행(2022), 국회예산정책처(2022)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5)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現 피용자보수비율) 산출 =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
- 6) 자영업자의 소득인 혼합소득이 보완적 지표로 제공되고 있지만, 혼합소득에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한다.

제2장 고정자본소모



제1절 현황

- 2021년 고정자본소모는 8.2% 증가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5.2	5.7	6.3	4.7	8.2

2017~2021년 기간의 고정자본소모는 연평균 6.2% 증가하여 명목 GDP 대비 비율이 2017년 18.5%에서 2021년 20.9%로 증가하였다. 고정자본소모는 고정자산이 일정 기간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노후화 등에 따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으로 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된다. 즉 고정자산투자(총고정자본형성)에 따라 자본스톡이 변화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다.

2022년 상반기 중 명목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4.5%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1.6% 감소하였다. 반면 자산의 내용연수가 짧은 연구개발자산으로 투자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8.2%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고정자본소모의 규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II-2] 명목 총고정자본형성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2		
	1/4	2/4	상반기
총고정자본형성	3.1	3.8	3.4
- 건설투자	4.3	4.7	4.5
- 설비투자	-2.8	-0.4	-1.6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8.8	7.6	8.2

자료: 한국은행

김상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6788-4752)

제2절 2023년 전망7)

- 2023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3.4% 전망)보다 0.5%p 높은 3.9%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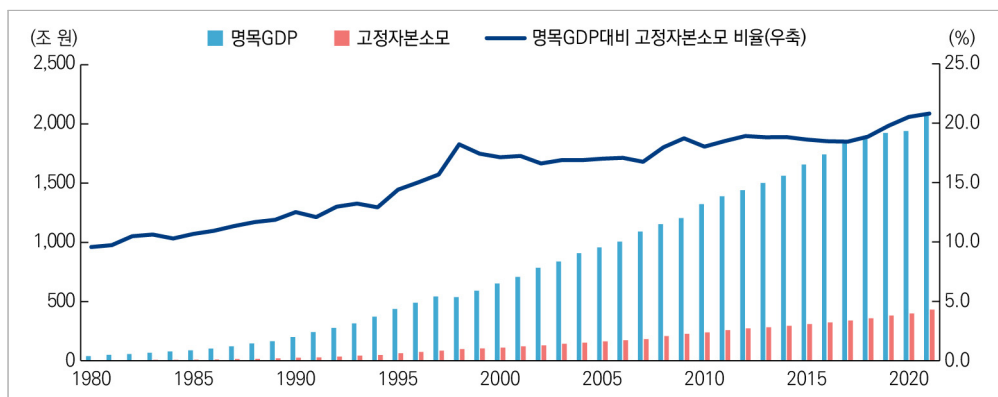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8.2	3.4	3.9	6.2	3.6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고정자본투자 증가 •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둔화

1980~2021년 기간의 명목GDP와 고정자본소모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고정자본 소모가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명목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율은 1980년대 9.6%에서 2021년 20.9%로 11.3%p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 되고 생산에서 자본이 활용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고정자본소모는 명목GDP와 총고정자본투자의 실증적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II-4] 명목GDP와 고정자본소모 추이(1980~2021)



자료: 한국은행

7) 생산자산 투자 활성화 및 노후 SOC 투자 촉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및 R&D 비과세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총고정자본형성)로 인한 자본스톡의 규모와, 생산에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고정자본소모가 결정되므로 명목GDP를 생산의 대리변수로, 총고정자본투자를 자본스톡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아 중기적으로 고정자본소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II-5]는 고정자본소모를 결정하는 명목GDP와 총고정자본형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정자본소모는 명목GDP와 총고정자본형성에 영향을 받는데,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는 고정자본소모를 증가시키며, 명목GDP도 생산의 증가로 인해 고정자본소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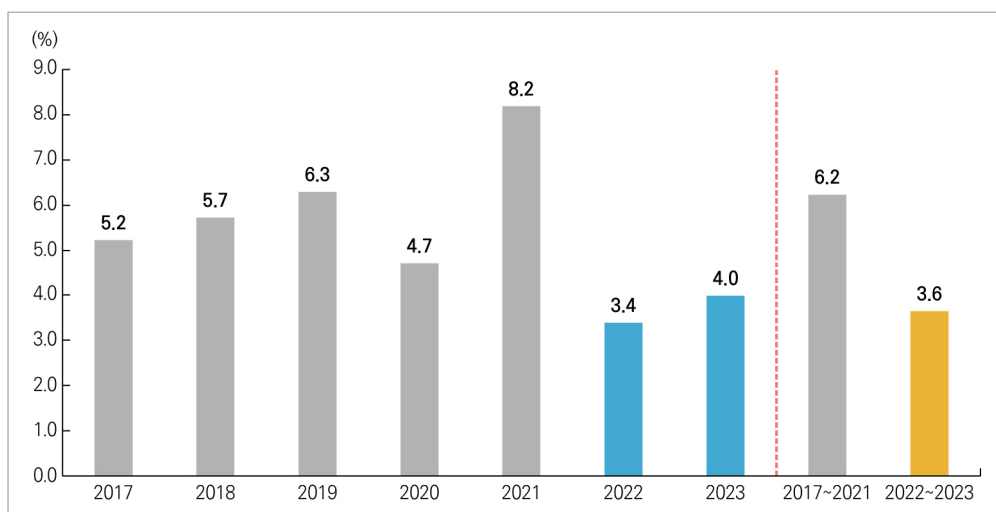
[그림 II-5]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고정자본소모는 3.4%, 2023년에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5년의 평균 성장률인 6.2%보다는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2] 고정자본소모란

□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노후화, 경상적 진부화 또는 일상적인 사고,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함
 - 즉, 유형고정자산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부화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데 그 가치 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을 의미

□ 고정자본소모를 추계하는 방법은?

- 자산의 종류별로 가치의 감소가 다르게 발생하게 되므로, 자산의 유형별로 자산규모(stock)를 추계하고 연도별 자산스톡의 차이를 통해 고정자본소모를 추계
 - 예를 들어, 새로운 전자 장치에 대한 특허는 새로운 장치가 시장에 출시될 것이므로 10년 후 가치가 크게 감소할 것이나 건물은 같은 기간 동안 가치의 감소가 작을 수 있음
 - ※ 국민계정의 자산의 분류 기준에서 고정자본소모가 계산되는 자산은 생산자산 중 고정자산으로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등이 있음

□ 고정자본소모가 필요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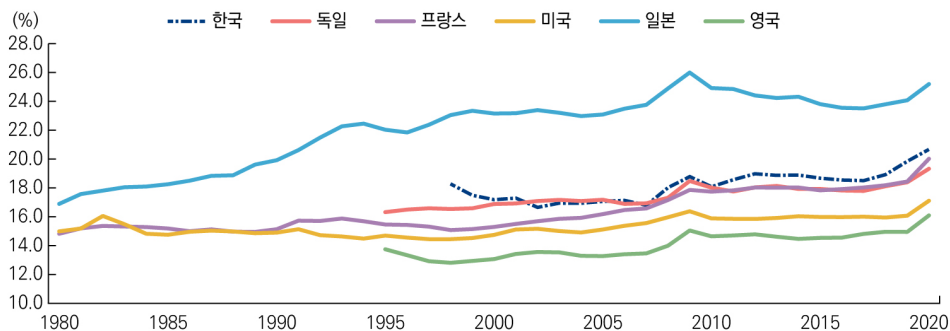
- 일정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의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에 부품도 사용되나, 조립기계도 닳게 되는데,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부품 등)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며, 순생산액은 총부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임
- 국민소득통계(flow)와 국민대차대조표(stock)를 연결하는 한편, 후생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순액 기준의 국민소득(GNI)을 추계하는데 사용됨

자료: 한국은행(2020),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 p.59
한국은행(2020),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p.10

[BOX 3]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율의 국제비교

- 주요국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이
 -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본이 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는 동일
 - 2020년 기준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은 일본(25.2%)이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20.7%)는 5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보다 높고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
 - 2020년 비율(%): 프랑스(20.0), 독일(19.3), 미국(17.1), 영국(16.9)
 - 우리나라의 자산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식재산생산물 자산의 경우 새로운 지식의 출현 등에 의해 진부화되는 경우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고 고정자본소모가 증가함
 - 고정자산 중 지식생산물자산 비중: 4.8%(’97)→6.0%(’04)→7.0%(’13)→8.2%(’19) → 8.4%(’21)
- ※ 연구개발(R&D)의 결과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예술품 원본 등

[주요국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 추이]



자료: OECD

제3장 순생산 및 수입세



제1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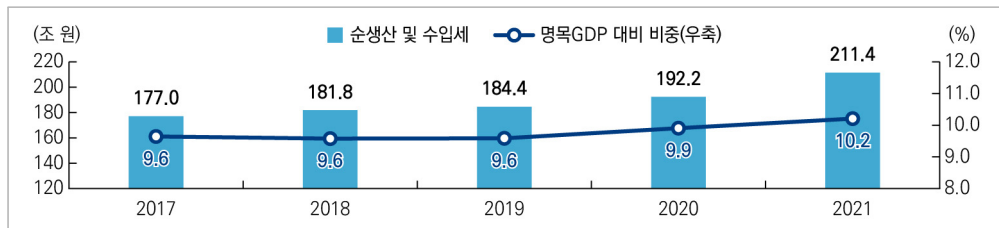
- 2021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11.4조원으로 GDP의 10.2%를 차지
 - 순생산 및 수입세는 지난 5년간 평균 4.8%의 속도로 증가
 - 동기간, GDP대비 비중은 9.6%에서 10.2%로 상승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5.7	2.7	1.5	4.2	10.0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제한 값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정부로 1차 분배되는 몫을 나타낸다. 2021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11.4조원으로 전체 GDP의 약 10.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17년 177.0조원에서 연간 4.8%씩 증가하여 2021년 211.4조원을 기록하였다. GDP 대비 비중 또한 2017년 9.6%에서 2021년 10.2%로 연평균 0.1%p의 속도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순생산 및 수입세의 GDP 대비 비중이 평균 10.3%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7]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제2절 2023년 전망⁸⁾

-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4.6% 전망)보다 1.2%p 높은 5.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10.0	4.6	5.8	4.8	5.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 환급액 증가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을 하락 • 수입 둔화로 인한 수입세 증가 둔화

2022년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증가율(10.0%)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지만, 지난 5년간(2017~2021년)의 증가율인 4.8%와 유사한 규모이다.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대비 5.8% 증가하고 명목GDP 대비 비중도 2022년 10.2%에서 2023년 10.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증가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명목경제성장률은 2023년 4.6%로 2022년(4.7%) 대비 소폭 하락하여 순생산 및 수입세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2023년도에 수입 및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는 과정에서 수출 둔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 GDP성장률과 수입액, 수출액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전망하였다. 생산세는 생산·판매 등에 기반하여 단위당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받으며 수입세는 수입액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관세환급특별법에 따라 수출에 활용된 수입 원재료는 기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수출액을 통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순생산 및 수

8)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1차 소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총수입 중 간접세 추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021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정부수입의 37.0%, 국세수입의 61.4%를 차지하는 등 사후적으로 총세수 중 간접세와 경상세·자본세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9) 2023년 수출 및 수입의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및 수출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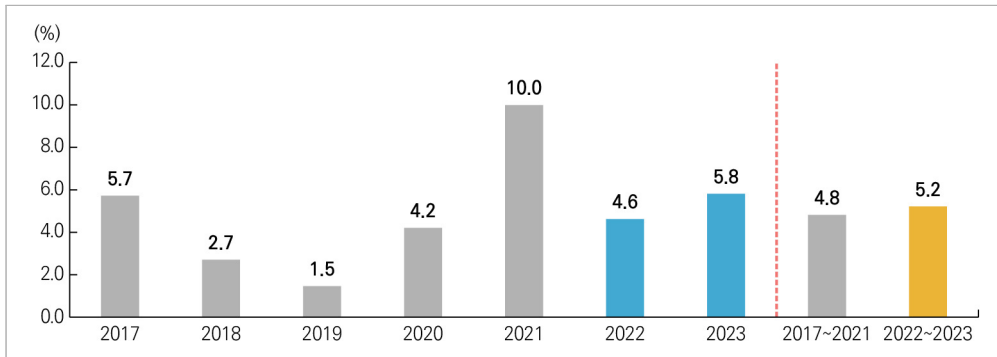
입세와 주요 결정요인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8]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1-9]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4장 영업잉여



제1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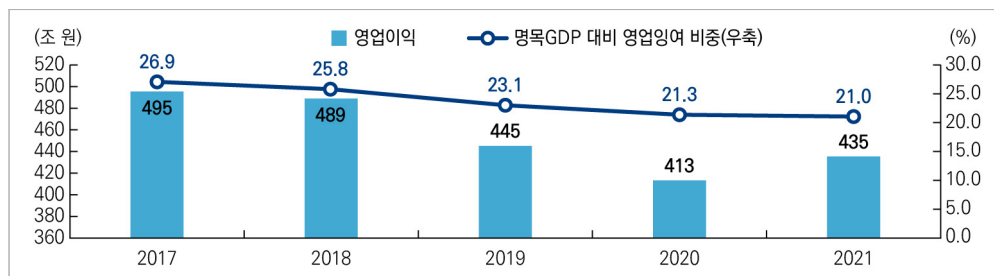
- 2021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5.3% 증가
 - 영업잉여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GDP 대비 비율은 21.0%이며 최근 5년 동안 지속 감소세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6.5	-1.1	-9.0	-7.1	5.3

영업잉여는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과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영업잉여는 435조원으로 전체 명목GDP의 21.0%를 차지하였다. 영업잉여의 비중은 I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의 GDP 연평균 증가율은 3.1%인데 비해 영업잉여는 -3.2%로 차이가 있었다. 동 기간 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은 2017년 26.9%에서 2021년 21.0%로 5.9%p 하락했다.

[그림 II-10]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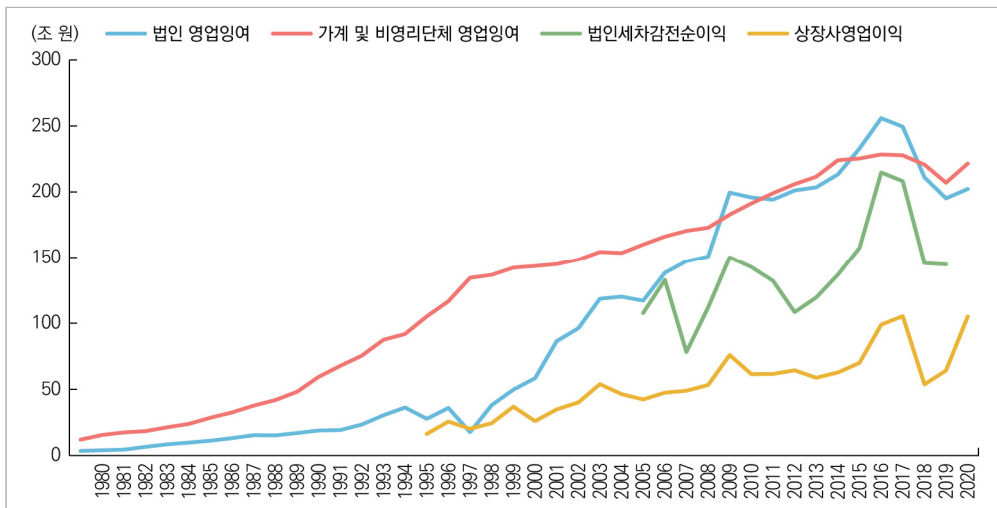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영업잉여는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零(0)이다. 기업은 아니지만 상업활동에 종사하며 기업과 동일한 생산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준기업 혹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급여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므로 생산활동으로부터 받는 영업잉여에는 노동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생산을 위한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영업잉여는 복합소득의 의미를 갖는다.

영업잉여는 법인영업잉여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구분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법인영업잉여는 202조원이었고 비법인영업잉여는 221조원으로 각각은 약 절반의 비중을 갖는다.¹¹⁾ 이 중 법인영업잉여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상장사 당기순이익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의 법인세차감전 법인순이익과 비교해보았다. 2020년 기업경영분석의 법인순이익은 145조원으로 법인 영업잉여 195조원과도 차이가 있지만 추세의 변화는 유사한 수준이며 상장사 당기순이익도 유사한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 법인·비법인·상장사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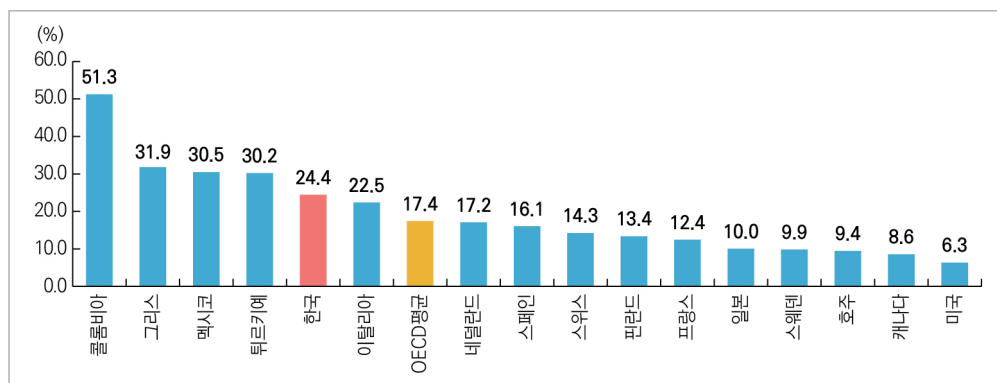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1) 영업잉여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주체별 2차 분배이며, 법인 영업잉여는 국외순기업 및 재산소득은 제한 값을 이용한다.

비법인영업잉여에 해당하는 준기업 혹은 가계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는 개별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수는 많지만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크지 않아 전수조사나 별도의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매년 조사하는데 2019년 기준 사업체가 417만개이고 이 중 개인사업체는 328만개로 기업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 조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사하지 않는다. 290만개 소상공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경영실적 및 수익성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수준값이 아닌 평균 수익률 자료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비법인영업잉여를 국민계정 외의 통계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20년 기준 24.4%로 OECD평균인 17.4%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OECD 평균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영업잉여 비중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그림 II-12] OECD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의미하며 2020년 기준. 한국의 2020년 수치는 OECD에서 제공하지 않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이용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2) 본고 Ⅲ부의 '중상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중 비임금근로자 전망에서 설명한다.

제2절 2023년 전망¹³⁾

- 2023년 영업잉여는 전년(-2.2% 전망)보다 6.5%p 높은 4.3%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5.3	-2.2	4.3	-3.2	1.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감소 •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유가·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 임금 상승 및 기업 수익성 하락

2022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2.2% 감소하고 2023년에는 4.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 5.3%보다는 낮은 증가율이지만, 지난 5년간(2017~2021)의 증가율 -3.2%를 상회하는 값이다.

영업잉여 전망은 분배GDP 구성항목 중 앞서 전망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한 잔차로 구한다.¹⁴⁾ 국민계정에서도 영업잉여를 소득발생계정의 균형 항목(balancing item)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N의 국민계정 매뉴얼에서도 영업잉여를 균형항목으로 추계하고 있다¹⁵⁾. 따라서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의 변화에 따라 영업잉여가 변동하는데, 최근 고용시장의 호황과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피용자보수 비중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잉여의 하방요인이 존재한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도 영업잉여의 하방요인이다.

13)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산활동 주체의 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 분배GDP 총량은 명목GDP를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15) 다만 국가별로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묶어서 파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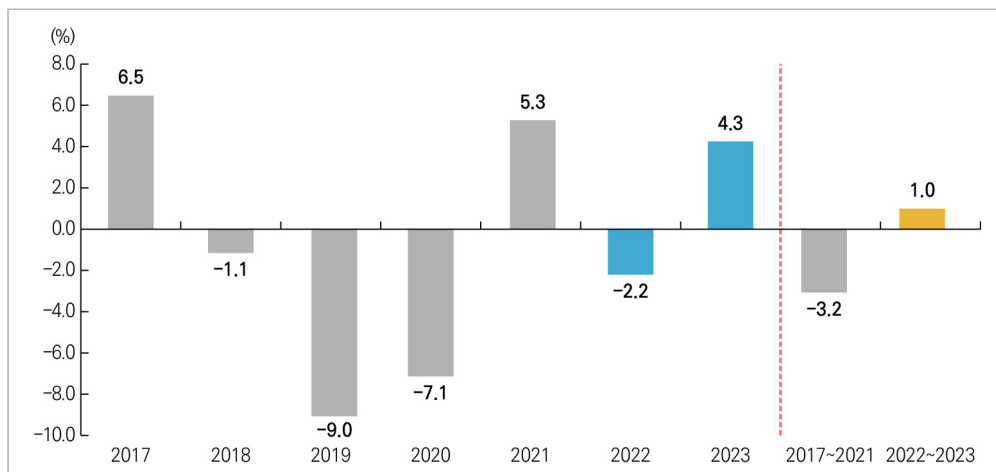
영업잉여 전망을 위한 참고를 위해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영업잉여는 법인과 비법인의 영업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영업잉여는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제조업 부가가치와 임금근로자 수를 검토한 결과 제조업 생산은 법인의 영업잉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임금근로자 수는 법인 영업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법인 영업잉여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와 비임금근로자 수를 이용하여 검토했으나 비임금근로자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림 11-13] 법인영업잉여 결정요인



분배국민소득의 균형 항목으로 영업잉여는 2022년에는 2.2% 감소하고, 2023년에는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은 2021년 21.0%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19.6%로 1.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14]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4] 영업잉여와 영업이익

□ 영업잉여는 법인과 비법인의 영업이익, 일부 노동소득을 포함

- 영업잉여는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으로 개인사업체와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의 소득을 포함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전체 사업체는 417만개가 있으며 이 중 회사법인은 15.0%의 비중
 - 개인사업체는 78.5%,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가 각각 3.3%
- 비법인은 비임금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정의에 따라 영업잉여에 포함됨
 -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의 영업잉여 비중은 비임금근로자가 없는 국가에 비해 높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비임금 근로자의 수가 많은 반면 프랑스는 비임금 근로자가 적는데, 이탈리아의 영업잉여에서 비임금 노동자의 보수 추정액을 제외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영업잉여 비중은 유사해짐¹⁶⁾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

(단위: 천개, %)

	전 체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2018년 (비중)	4,103	3,245 (79.1)	594 (14.5)	130 (3.2)	133 (3.2)
2019년 (비중)	4,175	3,276 (78.5)	624 (15.0)	137 (3.3)	13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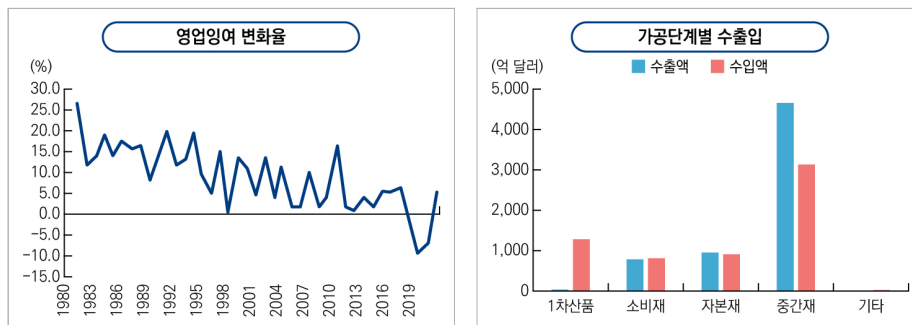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연간 변동이 큰 편

-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분배된 소득으로 총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하여 구하므로 연간 변동이 큰 편
 - 2000년 이후로는 연간변동률이 5%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그전에는 연간 10% 내외로 변동

-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간재 교역이 많아 교역조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가 크기 때문

[영업이익의 변동성]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변동률이 크며 규모가 큰 주요 기업의 업황과 경영실적에 의존도가 높음
 - 최근 5년간 수익현황이 조사된 상장사는 600여개사이며 매출액은 1,143조원에서 1,204조원으로 약 10% 내외의 변동을 갖는 반면, 영업이익은 54조원에서 105조원으로 변동률이 100%에 달함
- 개인사업체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0년 기준으로 1개사 당 2억원과 1,900만원(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1)

[상장사 수익현황]

(단위: 개,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회사수	629	641	671	677	686
매출액	1,148	1,204	1,177	1,143	1,342
영업이익	99	105	54	64	105
당기순이익	85	72	34	42	92
매출액이익률	7.44	5.97	2.86	3.65	6.86

자료: 통계청

16) Blades(2014)

제5장 국민총소득(GNI)



제1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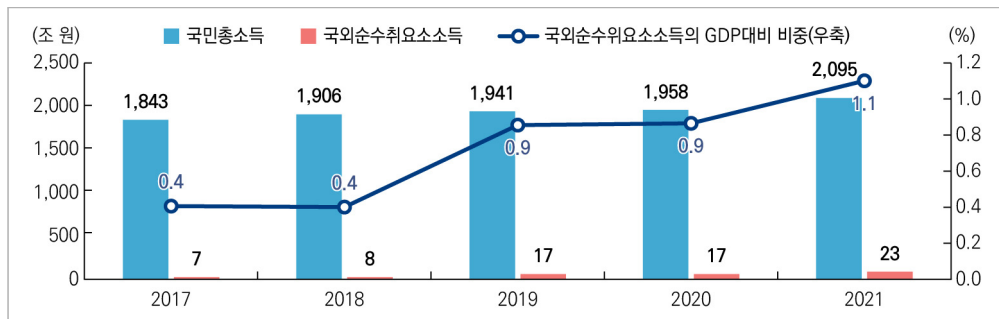
- 2021년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7.0% 증가
 - 명목GDP는 전년대비 6.7% 증가
 - 국외순수취요소소득(명목)이 전년대비 36.1% 증가하여 GDP 대비 비중이 1.1%로 확대됨에 따라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5.5	3.4	1.9	0.9	7.0

2021년 명목 국민총소득은 2,095조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으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2,072조원)의 성장률 6.7%보다 0.3%p 증가한 값이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3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은 2021년 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36.1% 증가하였다.

[그림 II-15] GNI 및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비중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그런데 2022년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은 2021년 상반기 대비 4.9% 증가했는데 동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p 높은 5.3%였다.

최근 국민총소득 증가율의 감소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역성장에 기인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해외의 생산활동에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만든다. 2022년 상반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1.9조원으로 전기인 2021년 하반기 7.9조원보다는 많지만, 2021년 상반기의 15.1조원보다는 21.2% 작았다¹⁵⁾.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노동과 자본을 국외 생산활동에 제공하고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과 외국의 노동과 자본을 국내 생산활동에 이용하고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차이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25.0%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3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0년에도 전년대비 2.0% 성장했으며 2021년에는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자본시장 투자수의 증가에 따라 3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II-3] 2022년 상반기 국민총소득 현황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국민총소득	1,843	1,906	1,941	1,958	1,035	1,060	1,086
(증가율)	(5.5)	(3.4)	(1.9)	(0.9)	(7.3)	(6.7)	(4.9)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4	7.5	7.6	16.6	15.1	7.9	11.9
(증가율)	(17.6)	(2.2)	(117.3)	(2.0)	(88.8)	(-12.2)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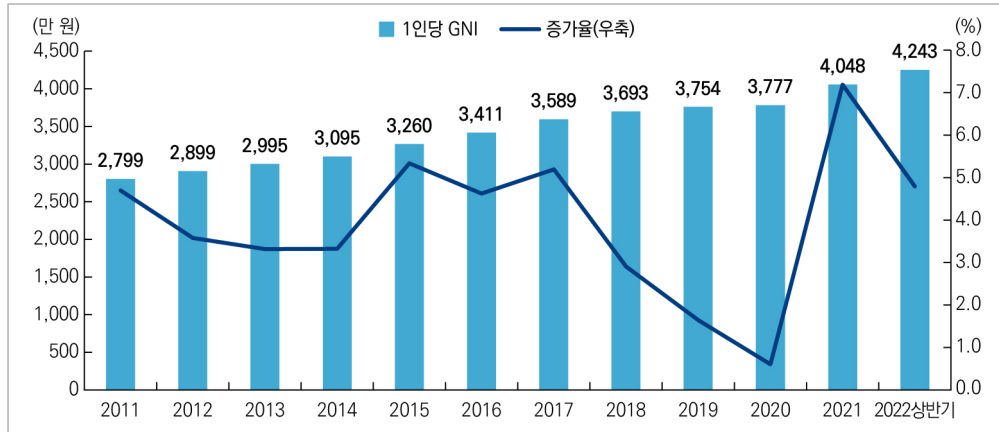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15)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분기별 동향을 세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국제수지 상 본원소득수지를 통해 구성항목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원화로 표시되며 본원소득수지는 달러로 표시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국외로부터 벌어들인 순소득을 의미한다. 본원소득수지는 급여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원소득수지 중 투자소득수지는 직접투자소득과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의 수입과 지급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비중이 큰 투자소득수입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하여 투자소득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비중인 증권투자소득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며, 가장 비중이 적은 기타투자소득은 16.7%의 비중으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한 바 있다.

국민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2년 상반기에 4,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¹⁶⁾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4,048만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의 증가가 정체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16]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 명목 국민총소득 ÷ 총인구
 자료: 한국은행

16) 총인구는 NABO 인구추계를 적용한다.

제2절 2023년 전망

- 2023년 국민총소득(GNI)은 4.7% 증가하며 전년(4.4%)보다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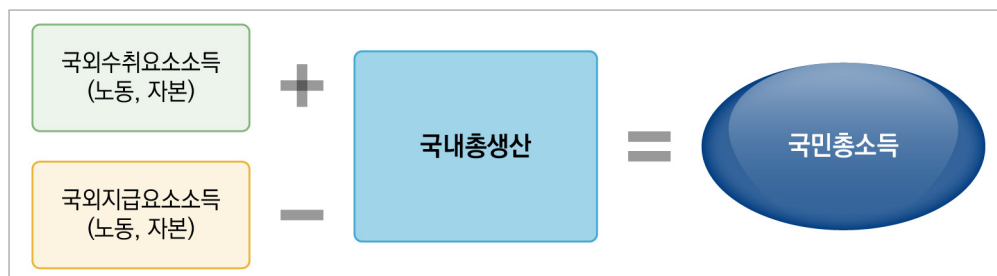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7.0	4.4	4.7	3.2	4.6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주요국 경제활동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자본투자 수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외자본투자 수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높은 고용률에 따른 해외 근로인력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자의 국내 배당금 투자 확대

2022년 국민총소득은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7.0% 및 지난 5년간(2017~2021)의 증가율인 3.2%를 상회하는 값이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총소득 전망을 위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수취와 지급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II-17]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결정은 국내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세계 시장으로 유출되고, 외국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국내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 세계 경제상황이 양호하면 국외 자본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국외순취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연기금 및 개인 등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거나 환율 상승에 따라 환차익이 증가하면 원화로 표시하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증가한다. 하방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외자본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해외 인력 유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이 증가할 경우에도 해당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유의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결정요인은 세계와 한국의 GDP와 국제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과 금리로 판단하였다.

[그림 II-18]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결정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년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역기저 효과와 투자수익 하락으로 인해 2022년에는 24.9%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GDP 대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2년에 0.8%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4]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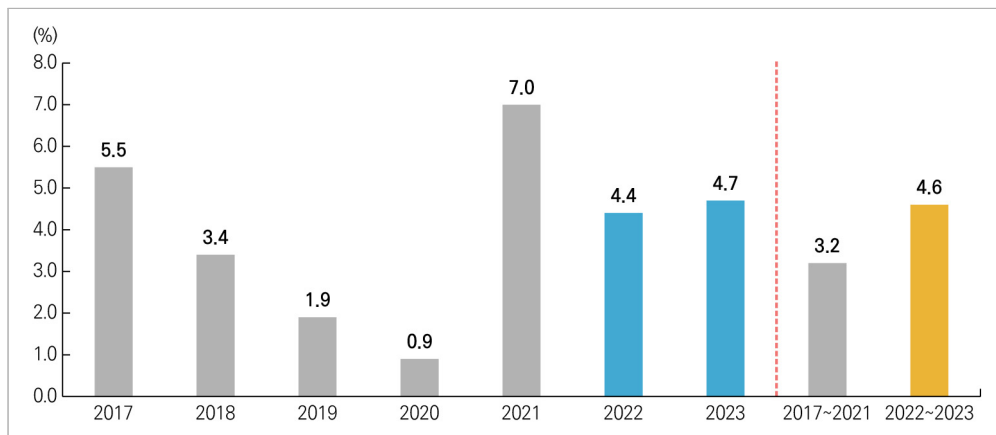
(단위: %)

	2021	2022 ^f	2023 ^f	2017~2021	2022~2023 ^f
국외순수취요소소득	49.3	-24.9	21.5	32.5	-4.5
(GDP 대비)	1.1	0.8	0.9	0.7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과 2023년의 국민총소득은 4.6% 증가하여 최근 5년의 평균 성장률인 3.2%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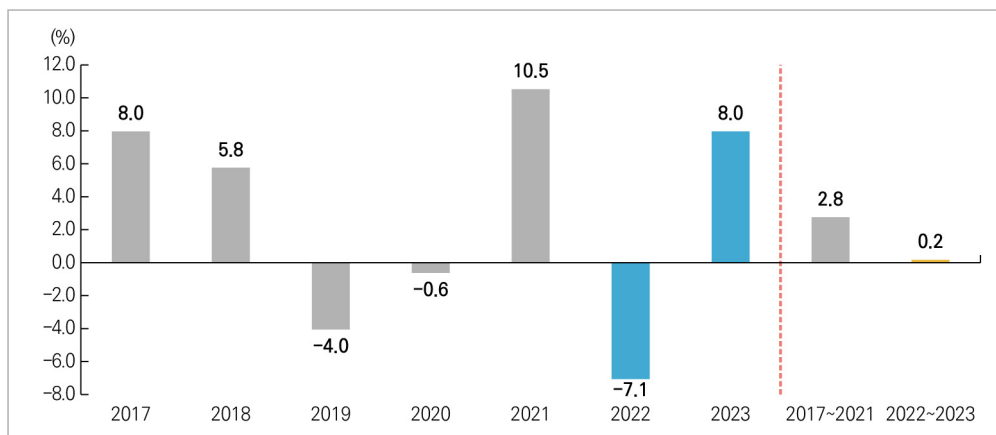
[그림 II-19] GNI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인당 소득의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2022년 1인당 GNI는 가파른 환율상승으로 인해 7.1% 하락하고, 2023년에는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0] 1인당 GNI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회에산정책처



제피부

인구·고용 중기 전망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제3부 인구·고용 중기 전망

제1장 인구



제1절 중기 전망¹⁾

- 2022~2026년 인구는 연평균 -0.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만명,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 2021	2022~ 2026
인구	5,163	5,161	5,158	5,152	5,146	-	-
증가율	-0.12	-0.03	-0.06	-0.10	-0.13	0.19	-0.11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여명 증가 • 국외 인구 순유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지속

2022년 상반기 중 출생아 수는 최저를 기록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12만 7,138명) 및 사망자 수(19만 3,768명)는 통계작성 이래 각각 최저 출생아 수, 최고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구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6만 5,631명 감소를 기록했으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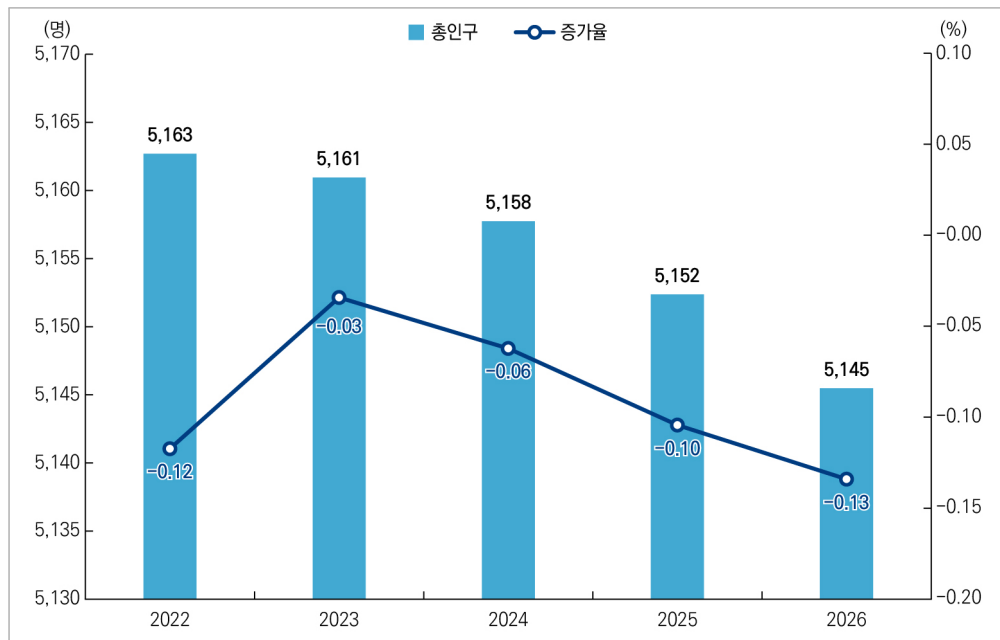
김상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6788-4752)

- 1) 인구전망은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1)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연도를 2020년까지 업데이트하여 내국인 인구를 전망하고, 통계청(2021)의 외국인 전망 수치를 합하여 총인구를 전망하였다.
- 2) 통계청, 「6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2.8.2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5,163만명으로(전년대비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급격한 인구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2026년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11%로 전망된다. 직전 5개년(2017~2021년) 기간 동안 인구가 연평균 0.19%씩 증가하였던 추이가 인구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추이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향후 경제성장 및 재정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³⁾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⁴⁾

[그림 III-1]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2022~2026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제1~4차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고 인구 규모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4)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12.20.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제2절 인구변동요인⁵⁾

1. 출산율

- 2022~2026년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15~49세 여성 인구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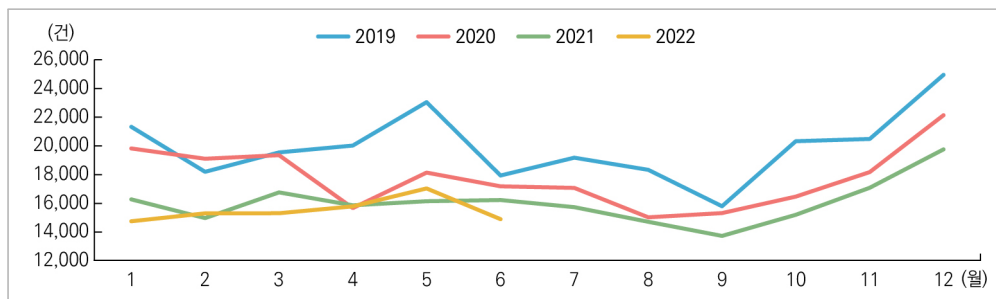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출산율	0.76	0.74	0.71	0.70	0.69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호조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향 감소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7,13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116명(-6.0%) 감소했다. 출생아 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다. 2022년 5월 혼인건수도 전년대비 5.5% 증가하면서 혼인 및 출산 회복 기대감이 존재했으나, 6월 8.2% 감소하여 14,898건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하고, 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출생아수 감소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증대로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일·가정양립 문화의 확산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III-2] 월별 혼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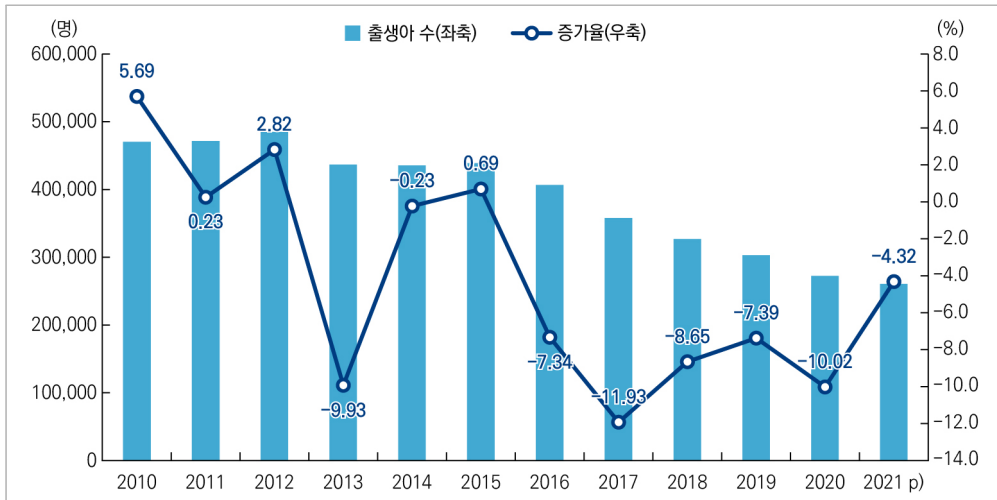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법안 및 예결산 심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이다. 2010년 출생아 수는 47만명이었으며, 2012년 4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2021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증가율은 평균 -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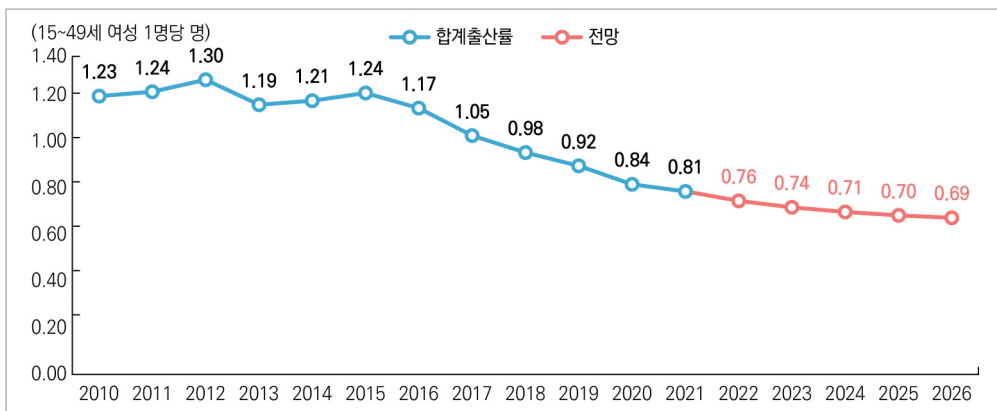
[그림 Ⅲ-3] 출생아 수(2010~2021년)



자료: 통계청

이러한 출산율 변화를 반영하여 합계출산율을 전망한 결과 2026년에는 0.69명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구가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BOX 5] 합계출산율 전망 비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2018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결혼 지연과 저출산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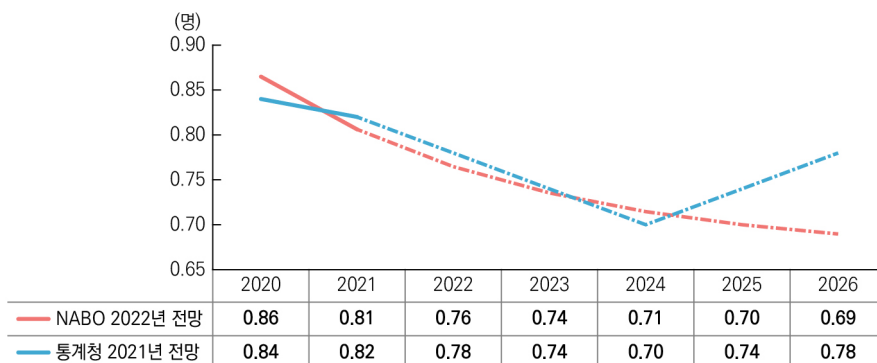
(15~49세 여성 인구 1명당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출산율	1.24	1.17	1.05	0.98	0.92	0.84	0.81

□ NABO는 합계출산율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다가 반등하여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시 합계출산율 전망치의 출산율 저점 시기를 2022년 0.78명(2019년 전망)에서 2024년 0.7명(2021년 전망)으로 조정하고 이후부터는 2031년 1.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 NABO 내국인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준인구 시점을 업데이트 하여 전망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2026년 0.69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내국인 합계출산율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2021)

2. 사망률

- 2022~2026년 기대여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기대여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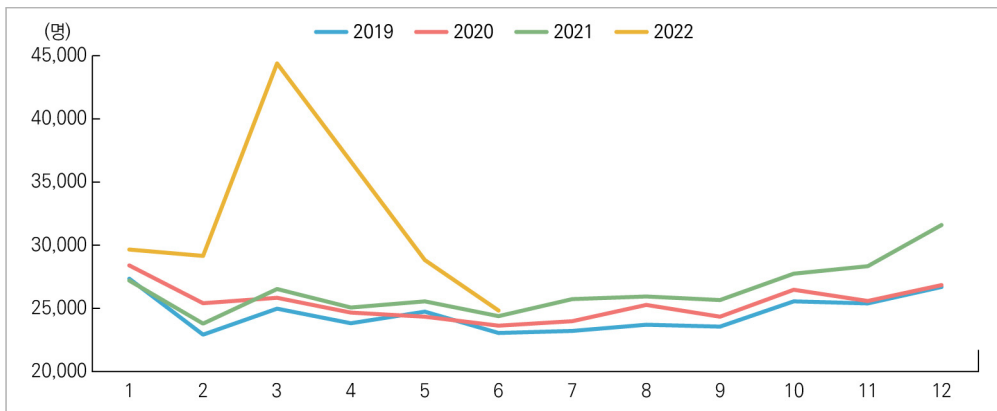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남성	81.0	81.3	81.7	82.0	82.3
여성	86.7	87.0	87.2	87.5	87.7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 건강증진 개선 확대

2022년 상반기 사망자 수는 19만 3,76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만 1,141명 (27.0%) 증가했다. 사망자 수 역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3~5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⁶⁾

[그림 Ⅲ-5] 월별 사망 추이(201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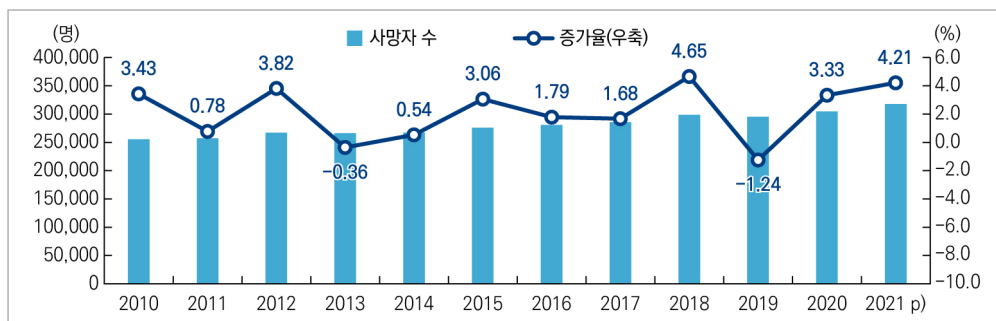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6) 통계청은 「2022년 3월 인구동향」(2022.5.25.)자료를 발표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3월에는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아래 그림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규모이다. 2010년 사망자 수는 25.5만명 수준에서 2021년 31.8만명(잠정)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증가율의 등락이 있으나, 2010~2021년 기간 동안 사망자 수 증가율은 평균 2.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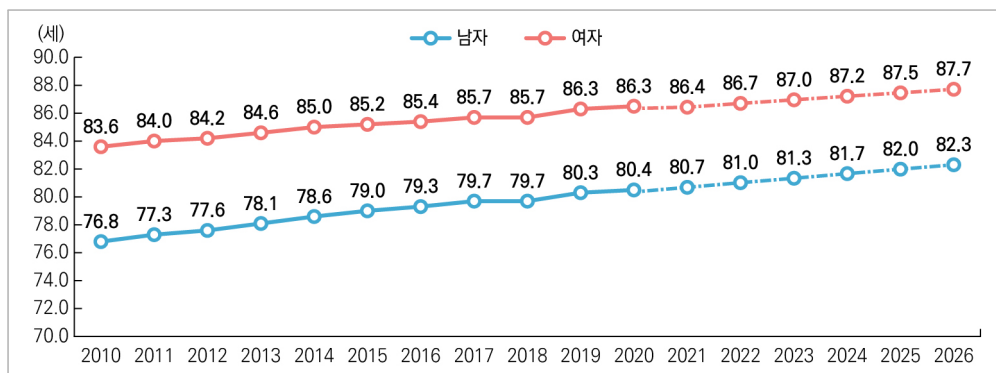
[그림 Ⅲ-6] 사망자 수 추이(2010~2021년)



자료: 통계청

이러한 사망자 수 변화를 반영하여 기대여명을 전망한 결과, 남성은 2020년 80.4세에서 2026년 82.3세로 1.9세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20년 86.3세에서 2026년 87.7세로 증가 1.4세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7)

[그림 Ⅲ-7] 기대여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7) 기대여명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 출생자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 라고도 한다. 성별 연령별 사망확률이 하락하면 기대여명이 상승한다.

3. 국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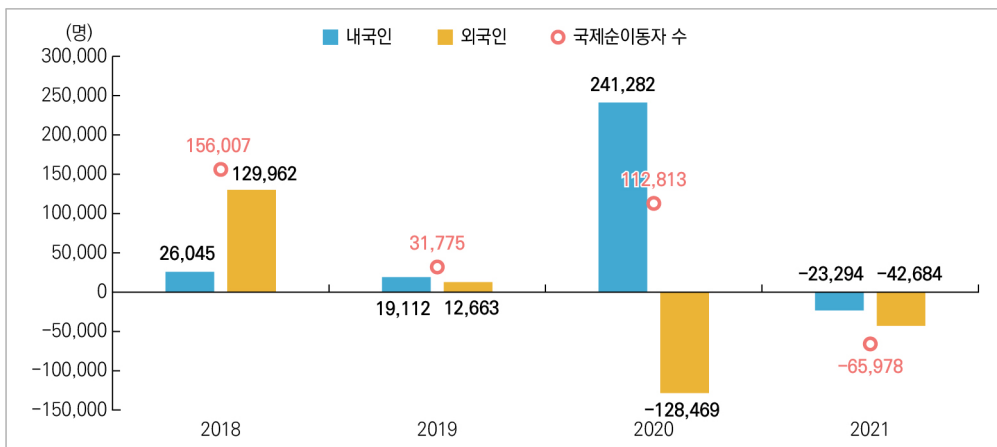
- 2022~2026년 국제이동률은 성별, 연령별 평균 이동률을 적용하여 추정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귀국 내국인 순유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외국인 12.8만명이 순유출하였으나, 내국인 24만명이 순유입하여 국제 순인구유입 규모는 11.3만명에 이르렀으나, 2021년에는 내·외국인이 모두 순유출하면서 총 6.6만명이 순유출하였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순유입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확대되면 국제 순이동자 수는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로 귀국한 내국인들의 순유출 확대는 인구규모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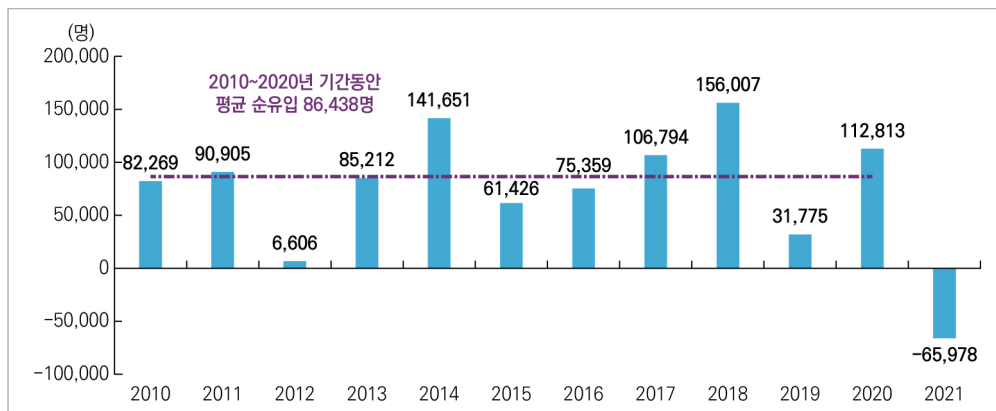
[그림 III-8] 연간 내·외국인 국제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아래 그림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인구 순유입 규모이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평균 8.6만명의 인구가 순유입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국제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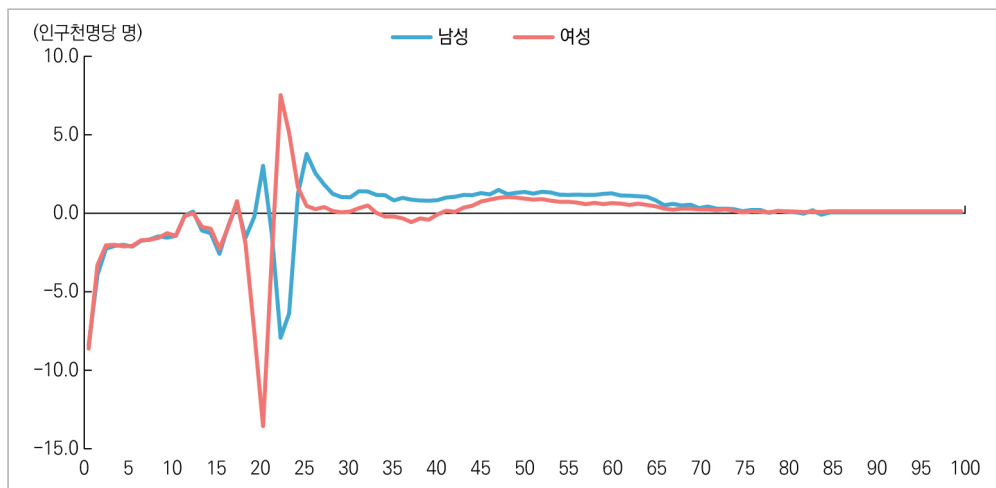
[그림 Ⅲ-9] 국제인구 순유입 추이(2010~2021년)



자료: 통계청

최근 7년(2013~2019년) 인구 순유입 규모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 국제이동률을 구하고 최저, 최고값을 제외한 5개년도 평균 국제이동률을 구해 인구 순이동자 수 추계에 적용하였다.

[그림 Ⅲ-10]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제2장 고용량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6만명(0.3%) 증가할 전망
 - 고용률은 전년(62.0% 전망) 대비 0.1%p 하락한 61.9%로 전망
-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63.9% 전망) 대비 0.2%p 높은 64.1%로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전년(3.0% 전망) 대비 0.4%p 높은 3.4%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월대비 만명,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취업자 수 증감 (증가율)	36.9 (1.4)	94.1 (3.5)	64.9 (2.4)	79.5 (2.9)	8.6 (0.3)
고용률	60.5	61.6	62.4	62.0	61.9
경제활동참가율	62.8	63.7	64.0	63.9	64.1
실업률	3.7	3.2	2.8	3.0	3.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	• 2022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 지속	•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1. 2022년 상반기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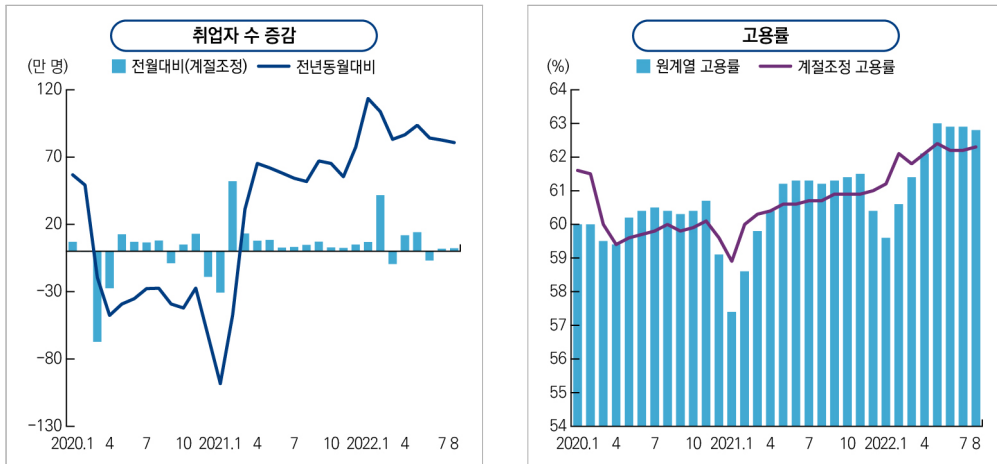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중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초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4.1만명(3.5%)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1.6%로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하였다.

[표 Ⅲ-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최근 동향

	2020	2021	2022 상반기
취업자 수 (만명)	2690.4	2,727.3	2785.8
(전년대비, 만명)	-21.8	36.9	94.1
고용률 (%)	60.1	60.5	61.6
(전년대비, %p)	-0.8	0.4	1.8

자료: 통계청

[그림 Ⅲ-11] 취업자 수 증감 및 고용률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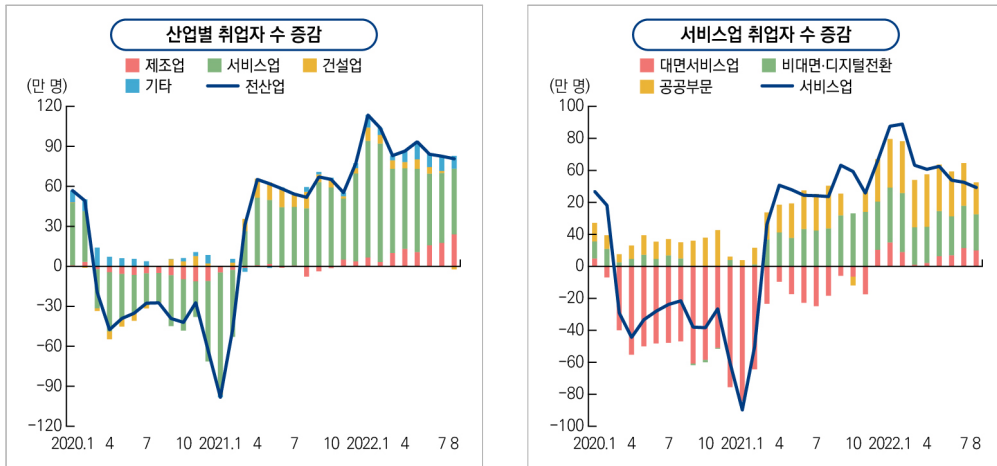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폭(전년동기대비 +69.2만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비대면·디지털전환 관련 업종(+28.2만명)과 공공비중이 높은 부문(+29.6만명)이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21년까지 감소세였던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증가 전환(+6.7만명)하였다. 다만,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 중 점차 둔화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 등의 영

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9.9만명)하였고, 증가 폭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 외 건설업(+6.7만명)과 기타 업종(+8.2만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그림 Ⅲ-12] 산업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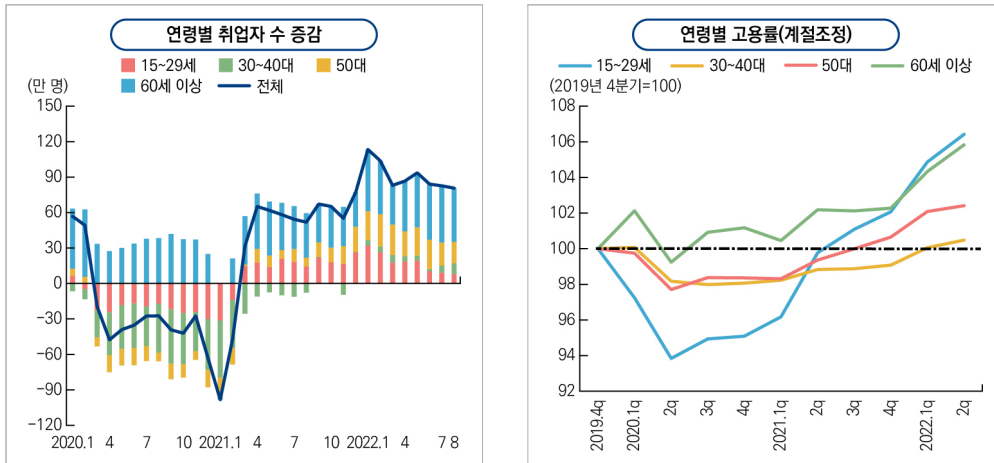
- 주: 1. 기타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을 의미
 2.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협회·단체·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3. 비대면·디지털 전환업종은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을 의미
 4. 공공부문이 높은 서비스업종은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연령별로는 고령층(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44.3만명)하였고, 청년층(15~29세, +20.8만명) 및 50대(+24.5만명)에서도 양호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소폭(+4.5만명) 증가에 그쳤다. 다만, 30~40대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자 수 변화만을 바탕으로 고용이 부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⁸⁾ 2022년 상반기 30~40대의 고용률(계절조정)은 77.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77.3%)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8) 2017년~2021년 동안 30~40대 인구(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는 연평균 약 21.4만명 감소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도 20.5만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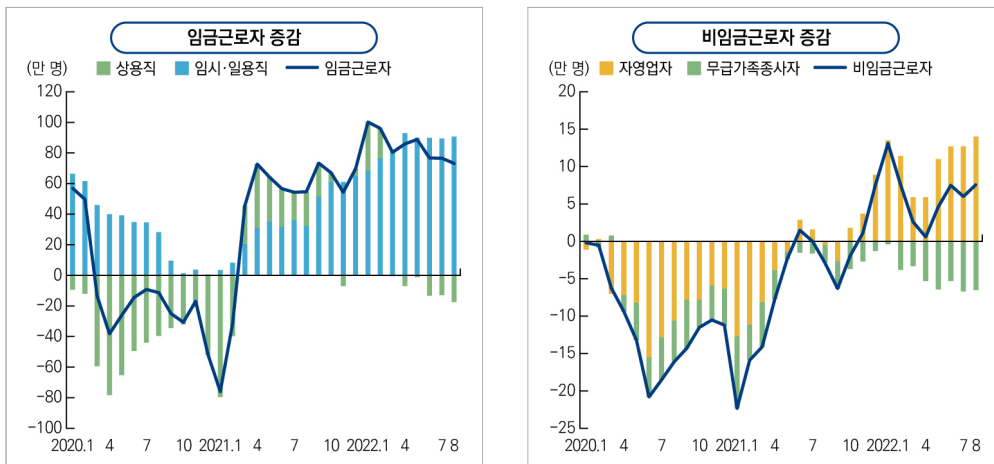
[그림 Ⅲ-13] 연령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88.1만명)하여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83.2만명)과 임시직(+16.0만명)은 증가하였고, 일용직(-11.1만명)은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상반기에 꾸준한 증가세(+10.1만명)를 보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4.1만명)하였다.

[그림 Ⅲ-1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월별 증감



자료: 통계청

2022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63%대)으로 복귀하였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전년동기대비 +0.9%p)보다는 여성(+1.3%p),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2.3%p)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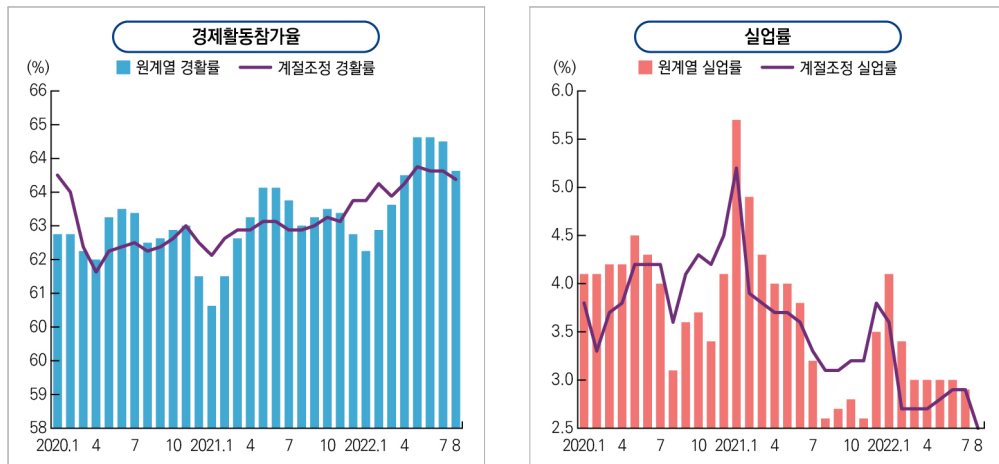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 실업률(-1.3%p)이 여성(-1.1%p)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고, 연령별로는 청년층(-2.7%p)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실업률 하락을 나타냈다.

[표 III-2]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최근 동향

	2020	2021	2022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3.7
(전년대비, %p)	-0.8	0.3	1.1
실업률(%)	4.0	3.7	3.2
(전년대비, %p)	0.2	-0.3	-1.2

자료: 통계청

[그림 III-15]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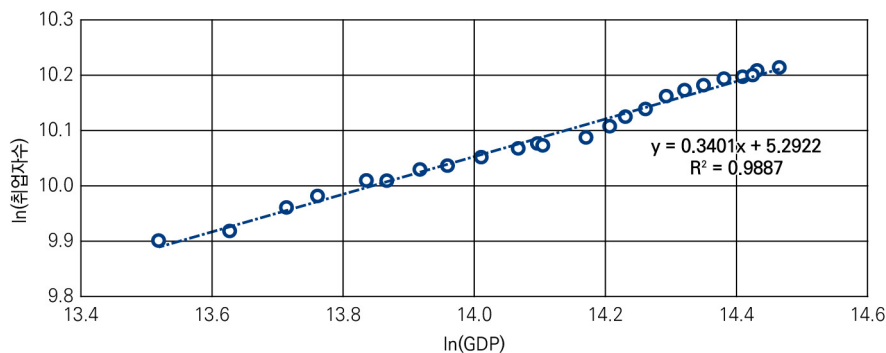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OX 6] 202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검토

□ 2022년은 이례적으로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22년 취업자 수는 79.5만명(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존 GDP와 취업자 수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례적 증가세
 - 1998~2021년 사이, GDP가 1% 상승할 때 취업자 수는 평균적으로 약 0.34% 증가 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20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임(아래 그림 참조)
 - 따라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5%)하에서 약 20만명대(0.8~0.9%)의 취업자 증가세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

[GDP와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199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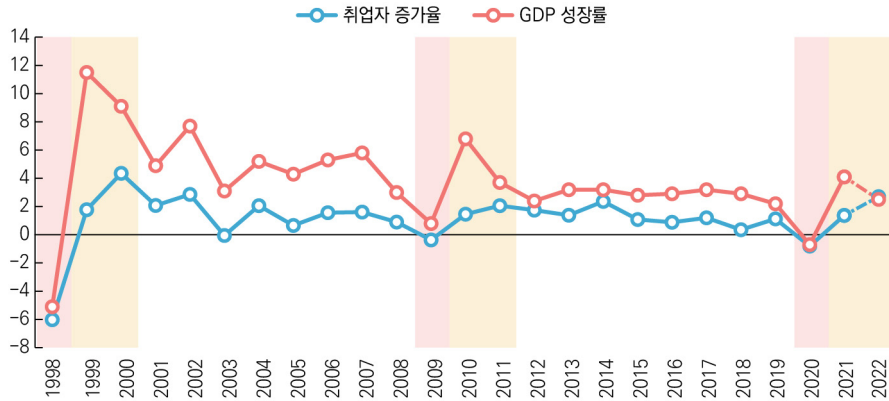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기존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

- 기존에도 위기 이후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은 상승하는 현상 발생
 -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성장률은 위기 다음해에 크게 반등한 후 2년 후 상승세가 축소
 - 반면, 취업자 수는 위기 다음해 보다 2년 후 더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율과 GDP성장률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탈동조화(de-coupling)

- 2022년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는 위기 2년 후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주: 1. 빨간색 음영은 위기시점(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을, 노란색 음영은 위기 발생 1~2년 후를 나타냄
 2. 실선은 실측치를, 점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이러한 현상은 위기와 회복 시점의 경제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위기 2년 후 위기 시점에 성장한 산업과, 위기로 침체되었다 회복된 산업의 노동수요가 겹치면서 GDP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고용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업 및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이 큰 성장을 이루었고, 2022년 상반기에도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반면, 2022년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위축되었던 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 전환
 - 세계 경제 정상화 및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교역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도 호황을 보이며 취업자 수 증가
- 다만, 이러한 경제상황 변화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

[BOX 7]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기여도 분석⁹⁾

□ (산업별)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기여

-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69.2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94.1만명) 중, 73.5%를 기여한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비중이 높은 산업(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업)은 전체 취업자 증가에 31.5%, 비대면 디지털전환 관련 업종은 30.0%의 기여도를 보임
 - 반면, 대면서비스업은 7.1%의 낮은 기여도를 보임
- 상반기, 제조업과 건설업 기타 산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양의 기여도를 나타냄
 - 제조업의 기여도는 10.5%, 건설업은 7.1%, 기타 산업은 8.7%

[취업자 수 기여도 분석(산업별)]

	2021년 상반기 취업자 수 (만명)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만명)	증감 (B-A)	기여도 (%)
전체	2,691.7	2,785.8	94.1	100.0
산업별				
제조업	439.3	449.2	9.9	10.5
서비스업	1,899.9	1,969.1	69.2	73.5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362.7	390.9	28.2	30.0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업	354.8	384.4	29.6	31.5
대면서비스업	886.4	893.1	6.7	7.1
건설업	205.1	211.8	6.7	7.1
기타 산업	147.7	155.9	8.2	8.7

- 주: 1. 비대면·디지털 전환업종은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을 의미
 2.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을 의미
 3. 기타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부문별 취업자 증가 기여도는 “부문별 취업자 수 증감/전체 취업자 수 증감”으로 도출하였다.

- (연령별)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는 고령층이 가장 크게 기여
 - 2022년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4.3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47.1%를 기여
 - 청년층(15~29세)과 50대 또한 20% 이상의 기여도를 나타낸 반면, 30~40대는 4.8%로 낮은 기여도를 보임

- (종사상지위별)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임금근로자 증가에 크게 기인
 - 2022년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88.1만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증가에 93.6%를 기여
 - 비임금근로자는 6.0만명 증가하여 6.4%의 기여도를 나타냄
 - 자영업자는 10.1만명 증가하여 10.7%의 기여도를 나타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4.1만명 감소하여 -4.3%의 기여도를 보임

[취업자 수 기여도 분석(연령별, 종사상지위별)]

	2021년 상반기 취업자 수 (만명)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만명)	증감 (B-A)	기여도 (%)
	2,691.7	2,785.8	94.1	100.0
연령별				
청년층(15~29세)	381.2	402.1	20.8	22.1
30~40대	1,155.6	1,160.1	4.5	4.8
50대	634.1	658.5	24.5	26.0
60세 이상	520.9	565.2	44.3	47.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045.3	2,133.4	88.1	93.6
비임금근로자	646.5	652.5	6.0	6.4
자영업자	548.0	558.1	10.1	10.7
무급가족종사자	98.6	94.5	-4.1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2년 및 2023년 고용 전망

하반기 중 취업자 수는 64.9만명 증가하여, 2022년 중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79.5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반기에 비해 약 29.1만 명 축소된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었던 기저효과에 일부 기인한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GDP성장률은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되어 소비자심리지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둔화와 소비자심리 악화 또한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신속입국 등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폭은 소폭 완화될 수 있다.¹⁰⁾

2022년 하반기 고용률은 62.4%를 기록하여 2022년 고용률은 62.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의 고용률 전망치는 상반기 대비 약 0.8%p 높은 수치이지만, 이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¹¹⁾ 고용률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상반기는 1.8%p 상승한 반면, 하반기는 1.2%p로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2022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를 기록하여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3.9%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하반기 2.8%로 하락하여 2022년 실업률은 3.0%가 될 전망이다.

2023년 중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8.6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2.1만명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여 실업률은 3.4%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3년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22년은 기존 GDP와 취업자 수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다¹²⁾. 이러한 급격한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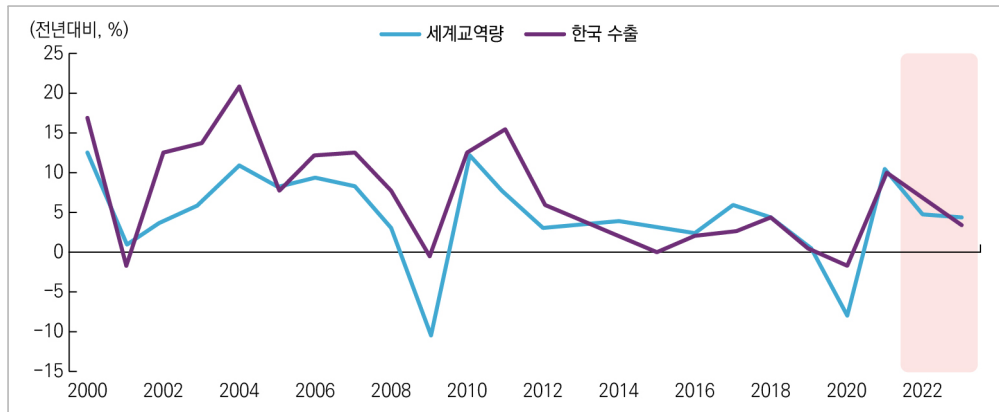
10) 정부는 2022년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11) 고용률은 1월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6~7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 또한, 평균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고용률이 높다.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x 6]에 기술하였다.

2023년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II-16] 세계 교역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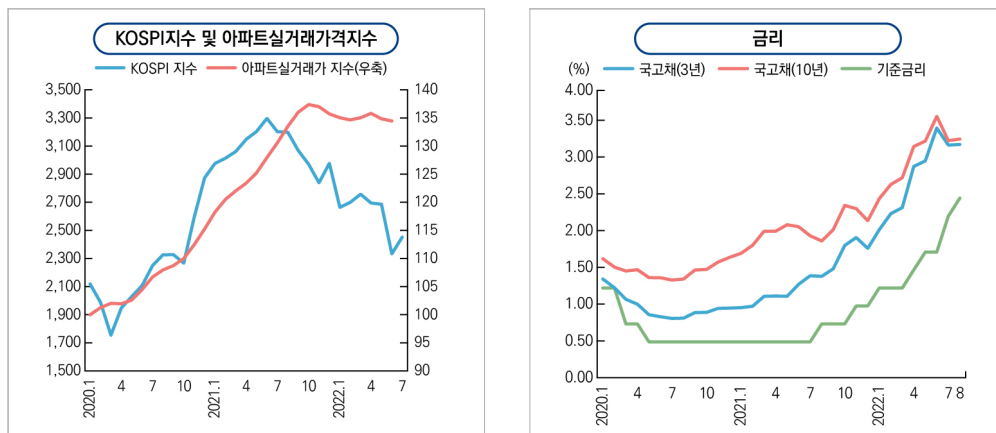


주: 2022년 이후(음영표시)는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2년 4월)

2023년에는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KOSPI 지수는 2021년 6월의 고점(3296.7) 이후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하였던 주택실거래가(아파트)도 2021년 10월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산가격 하락과 높은 금리 수준이 2023년에도 지속된다면 민간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Ⅲ-17] 자산가격 및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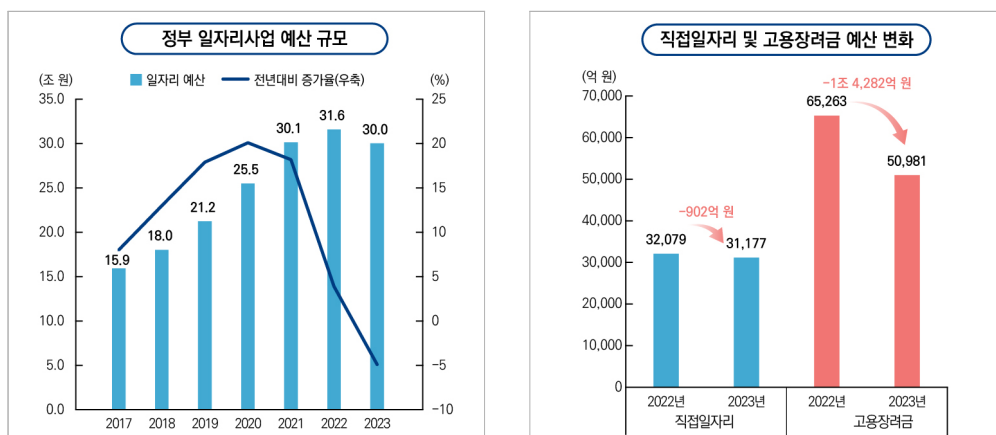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자료: 한국은행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고용장려금 축소는 2023년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 증가해온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4.9% 축소하고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전년대비 -902억원)과 고용장려금(-1조 4,282억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접일자리 수는 98.3만명으로 올해 대비 7.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사업 예산안 조정은 일자리사업을 코로나19 대응에서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다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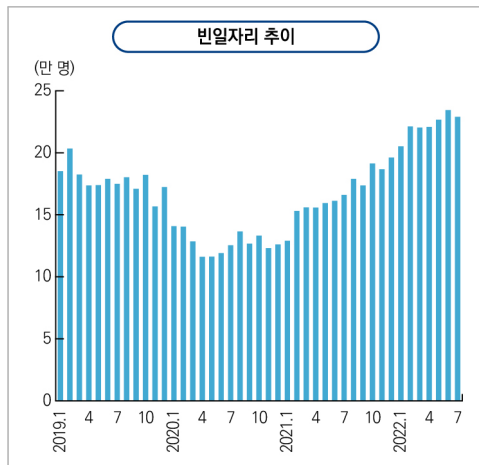
[그림 Ⅲ-18]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및 직접일자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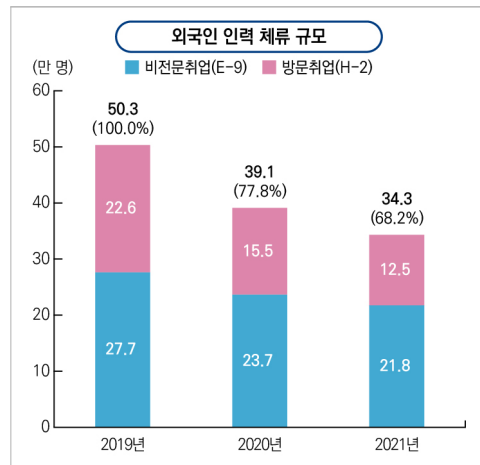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3년 일자리예산안 30.0조원,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2022. 8. 30.)

반면,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는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는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¹³⁾ 2022년 6월 빈일자리 수는 23.4만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7월 들어 빈일자리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300인 미만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여전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의 원인으로 외국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2021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동포(H-2) 체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68.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도 방역 등을 이유로 업종별 쿼터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도입 규모는 실제 수요에 미달하였다.¹⁴⁾ 2023년부터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정상화된다면,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⁵⁾

[그림 III-19] 빈 일자리 및 외국인력 체류규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법무부

13) 빈일자리란 사업체가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14)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2022. 8. 8.

15) 다만, 외국인 인력도입 정상화가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송상운·배기원(2022a)은 2022년 높은 취업자 증가세의 원인으로 청년 및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를 지목하였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생산·현장직, 농림어업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 외국인력과 고령층이 경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력이 해당 분야의 고령층 취업자를 대체한다면,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2022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코로나19 시기에 성장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및 보건·복지업 등에서 높은 노동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¹⁶⁾ 만약 2023년에도 비대면·디지털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과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 향후 고용은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X 6]에 기술하였다.

제2절 중기 전망¹⁷⁾

- 2022~2026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4.3만명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 연평균 17.3만명)에 비해 증가폭 확대
- 다만, 이는 2022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며 2023년부터 증가세 크게 둔화
(전년대비, 연평균, 만명)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79.5	8.6	10.3	12.1	11.3	17.3	24.3

- 2022~2026년 중 고용률은 평균 62.0%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60.6만명) 대비 1.4%p 상승
- 2023년 이후 취업자 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 또한 크게 둔화되어 61.9~62.0% 수준의 고용률 지속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62.0	61.9	61.9	62.0	62.0	60.6	62.0

- 2022~2026년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4.2%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63.0%) 대비 1.2%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상승 지속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63.9	64.1	64.3	64.3	64.4	63.0	64.2

- 2022~2026년 중 실업률은 평균 3.5%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3.8%) 대비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는 2022년의 낮은 실업률 수준에 크게 기인하며, 2024년부터는 3.7% 수준으로 상승

(연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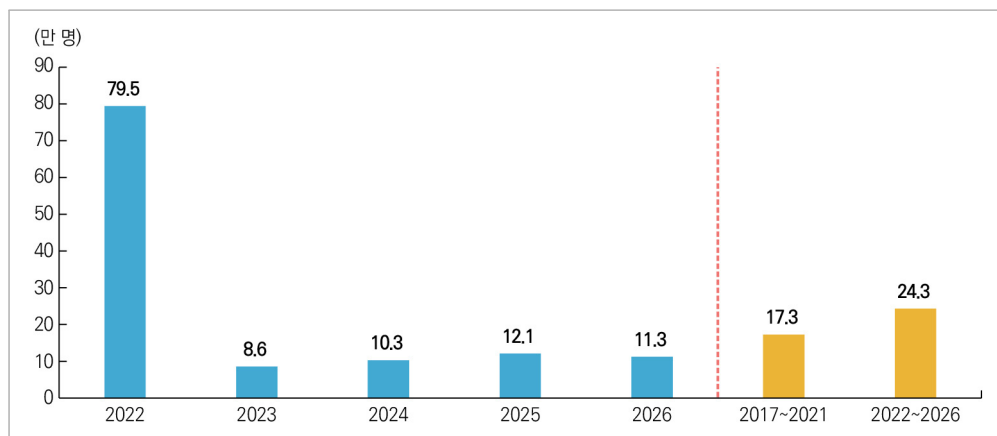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3.0	3.4	3.7	3.7	3.7	3.8	3.5

17) 노동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통해 향후 고용정책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근로소득세 납세자 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추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2~2026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4.3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증가 폭(+17.3만명)에 비해 약 7.1만명 확대된 수치이다. 다만 향후 5년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79.5만명)에 크게 기인한다. 2022년을 제외한 2023~2026년 4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10.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한다. 2023년부터의 낮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크게 기인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를 기록한 이후 2023~2026년 평균 2.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⁸⁾ 또한, 2022년의 예상치 못한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로 향후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다시 기존의 관계로 복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Box 6 참고).

따라서 본 전망에서는 2022년의 급격한 취업자 증가가 2023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Ⅲ-20] 중기 취업자 수 증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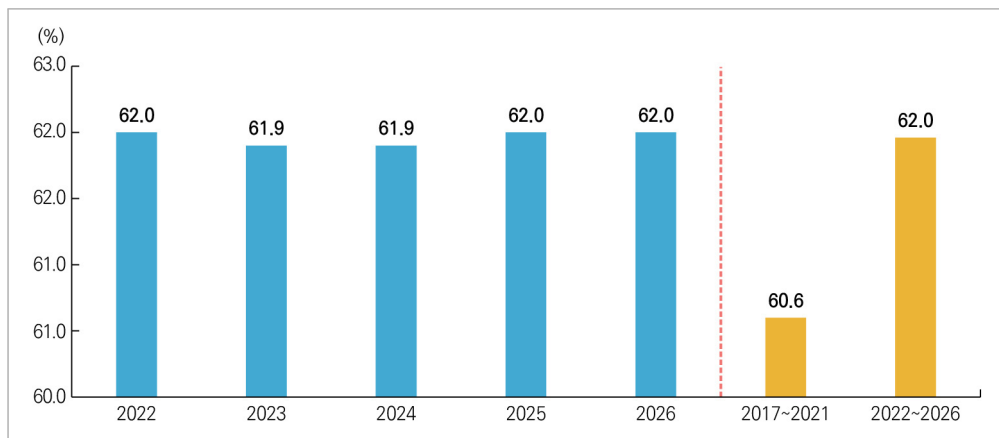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18)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2022~2026년 고용률은 평균 6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평균 고용률인 60.6%보다 1.4%p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의 큰 폭 증가로 62.0%를 기록한 고용률은 2026년까지도 61.9~62.0%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률의 분자인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2023년부터 크게 축소되지만,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 또한 느린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¹⁹⁾

[그림 Ⅲ-21] 중기 고용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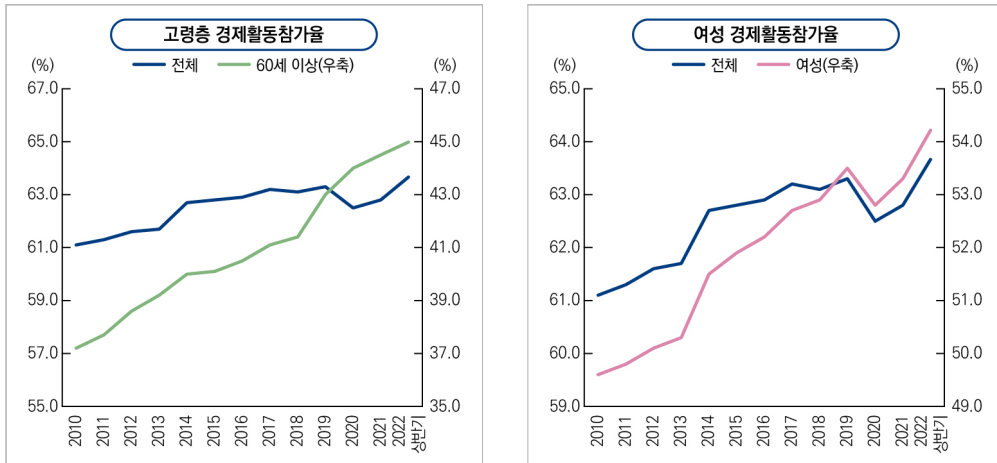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노동공급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6년까지 지속 상승하여 2026년에 6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향후 5년 동안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및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승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향후 5년 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⁰⁾

19) 2022~2026년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연간 약 0.3~0.4%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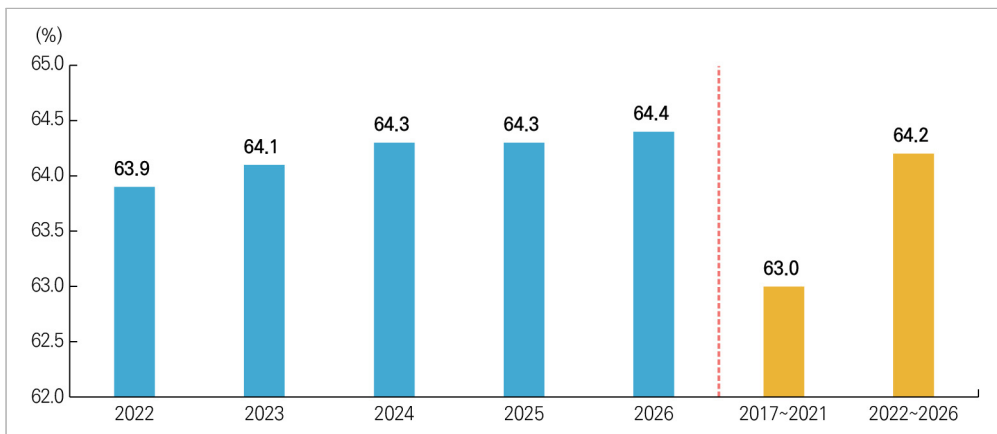
20) 송상운·배기원(2022b)는 최근 노동공급 확대요인을 분석하면서 여성 청년층의 미혼비율 증가가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요인 중 하나임을 보였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의 사유로 노동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22] 고령층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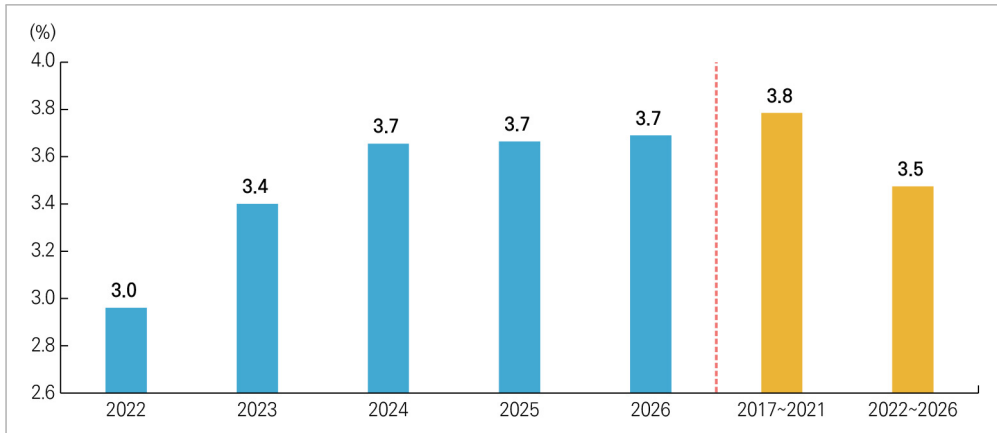
[그림 III-23] 중기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실업률은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3년 3.4%로 상승하고, 2024년부터는 3.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24] 중기 실업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중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며,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경제성장)는 노동수요(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 및 가격(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량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수요의 증가는 노동탐색의 기회비용을 줄여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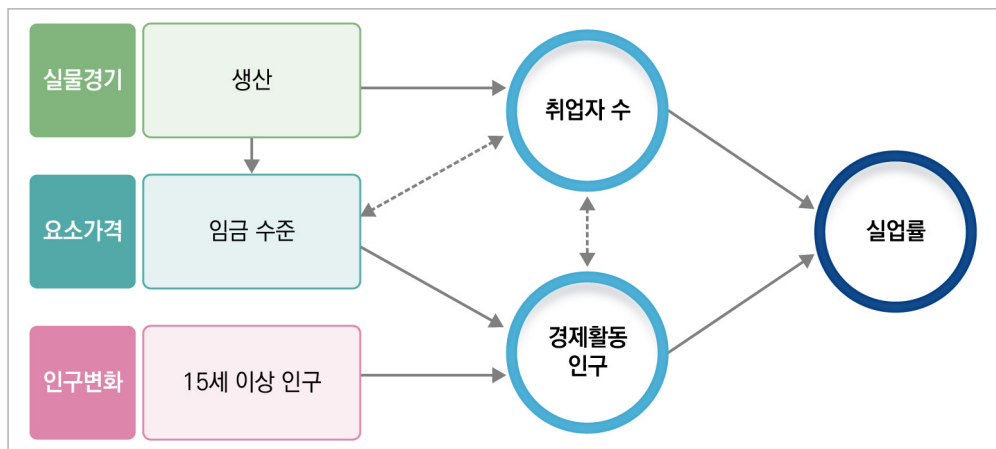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사용자 측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와 같은 자본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진다.²²⁾ 반면, 노동자는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을 공급할 유인이 커져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규모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래 [그림 Ⅲ-25]은 고용지표와, 이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22~2026년 기간 중 고용지표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전망하였다.

21) 안주엽(2001)

22) 다만, 이번 전망에서는 자본투입의 단기적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투입 결정이 임금에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III-25] 고용지표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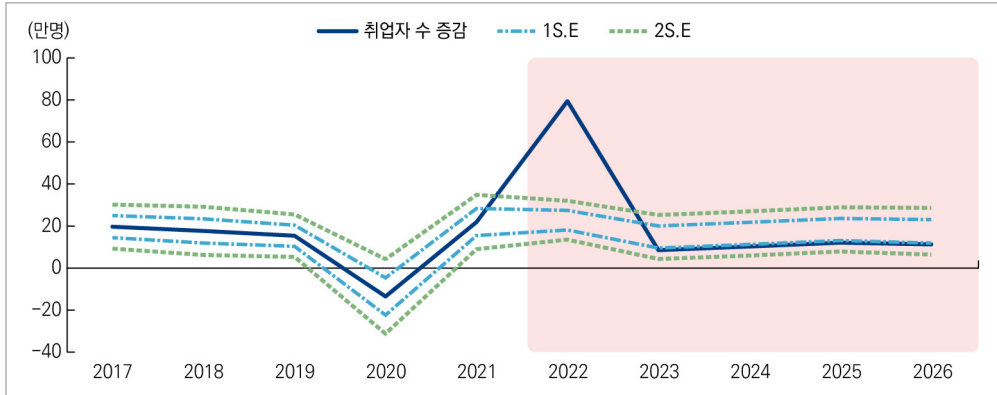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 III-26]은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예측치와 전망 모형의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의 취업자 수는 전망 모형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취업자 수 증감 전망은 1~8월의 실측치(1~8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감: +91.0만명)에 기반하여 모형의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이례적 충격이기 때문에,²³⁾ 향후 몇 년간 취업자 수 증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2023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소폭 하향 조정하였다. 2022년 실업률 또한, 1~8월의 실측치에 기반할 때(1~8월 평균 실업률: 3.1%),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값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3년부터 상승하여 2024년부터는 3.7%로 수렴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소폭 높은 수치이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⁴⁾

2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X 6]에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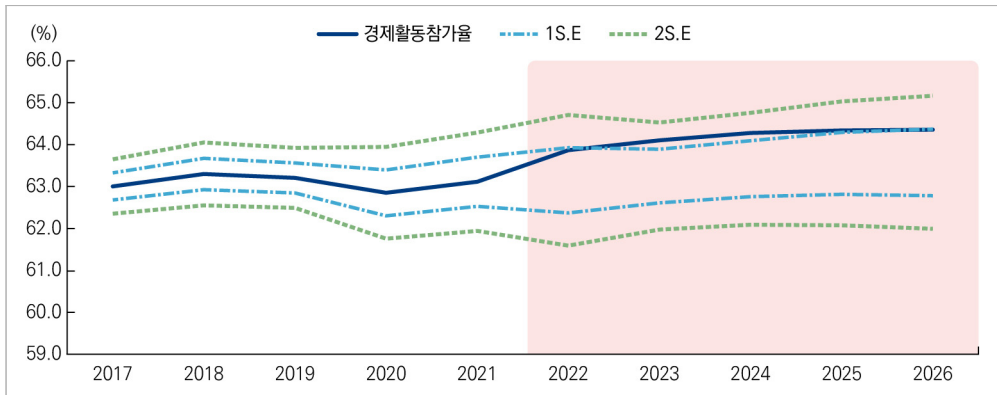
24)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II: 성장 및 금융 부문」에서 설명한다.

[그림 III-26] 취업자 수 증감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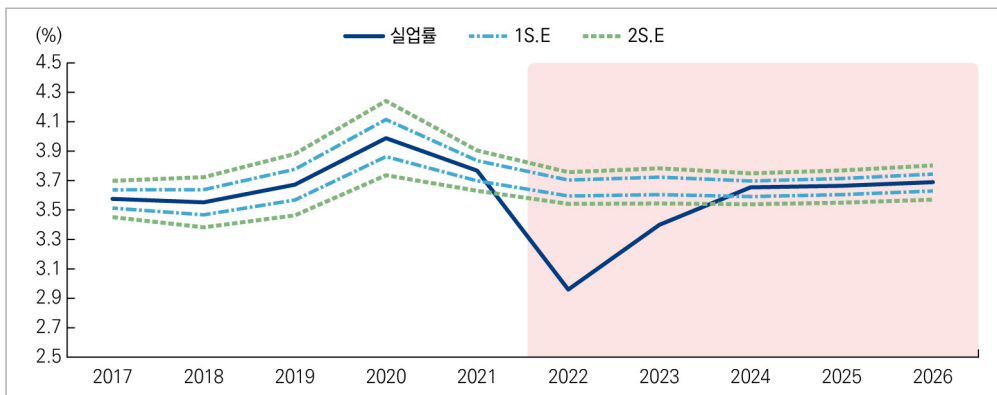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I-27]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I-28] 실업률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 2022~2026년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연평균 77.4%로 전망
 - 지난 5년(2017~2021년, 75.3%) 대비 2.1%p 상승
 - 임금근로자 비중은 추세적 상승을 지속하여 2026년에 78.3%에 달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76.5	76.9	77.4	77.8	78.3	75.3	77.4

- 2022~2026년 중 자영업자 비중은 연평균 19.3%가 될 것으로 전망
 - 지난 5년(2017~2021년, 20.8%) 대비 1.5%p 하락
 - 2022년부터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짐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19.9	19.6	19.3	19.0	18.7	20.8	19.3

- 2022~2026년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연평균 3.3%가 될 것으로 전망
 - 지난 5년(2017~2021년, 3.9%) 대비 0.6%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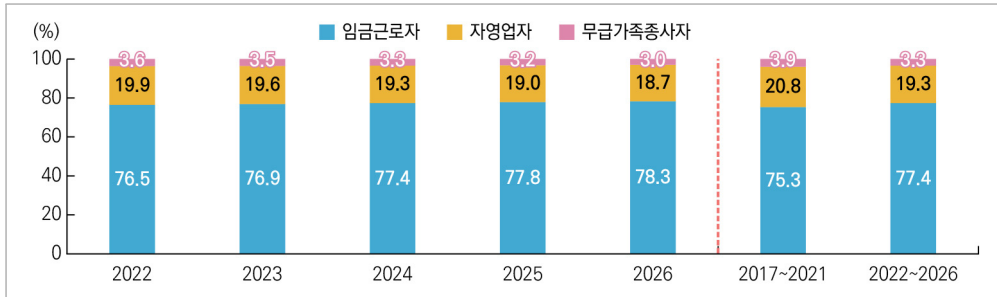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3.6	3.5	3.3	3.2	3.0	3.9	3.3

2022~2026년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7.4%로 지난 5년의 평균인 75.3% 대비 약 2.1%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고용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31.5% 이후 연평균 약 0.8%p의 속도로 지속 상승하여 2009년 70% 대로 올라갔고 2010년 이후 그 속도가 연평균 0.5%p대로 하락하였지만,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6년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8.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비중의 상승과 반대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기존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20.2%였던 자영업자 비중은 2022년부터 20%대 이하로 떨어지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추세적인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6년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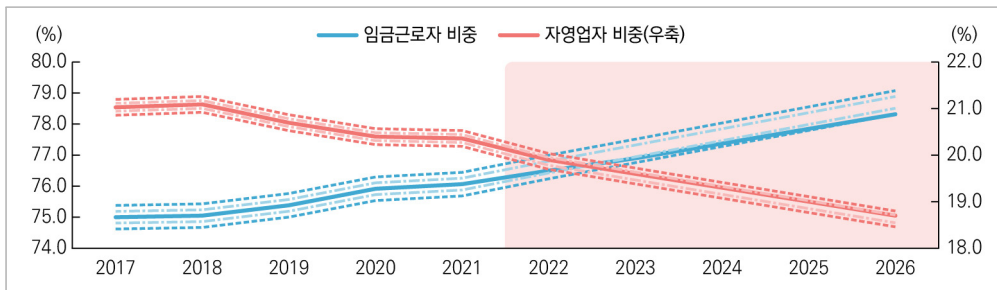
[그림 III-29] 중기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22~2026년 기간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은 기존의 증감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망하였다. 아래 [그림 III-30]은 모형을 통해 전망한 임금근로자 비중 및 자영업자 비중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속도변화를 반영하여 임금근로자 비중의 모형 추정치는 하향 조정하였고, 자영업자 비중 추정치는 소폭 상향조정하였다. 임금근로자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 전망치를 확정된 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을 잔차로 도출하였다.²⁵⁾

[그림 III-30]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중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5)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전망하여도 잔차로 도출한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임금상승률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임금은 2022년 대비 4.0%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임금상승률	4.6	5.8	4.1	4.9	3.9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지속 • 노동생산성 상승 • 2022년 물가상승률의 사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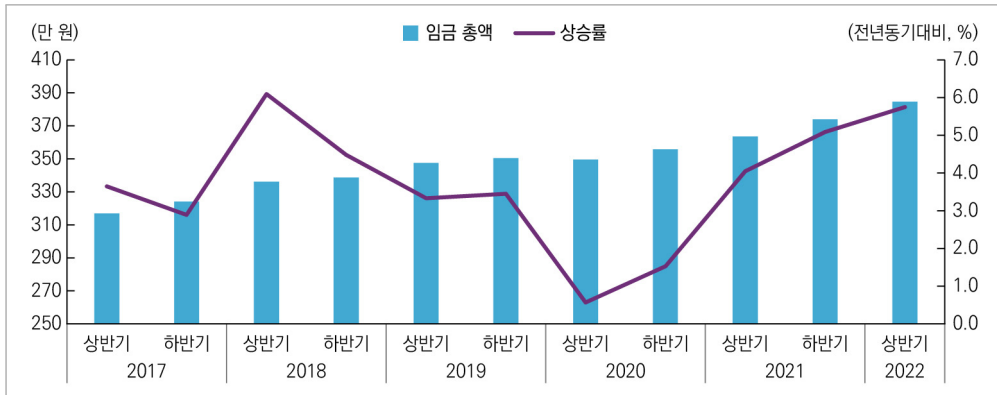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중 임금은 전년대비 20.9만원(5.8%)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임금은 전년대비 1.1% 상승하여 낮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021년 4.6%, 2022년 상반기 5.8%를 상승하여 점차 상승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표 III-3] 임금 최근 동향

	2020	2021	2022 상반기
임금(만원)	352.7	368.9	374.2
(상승률, %)	1.1	4.6	5.8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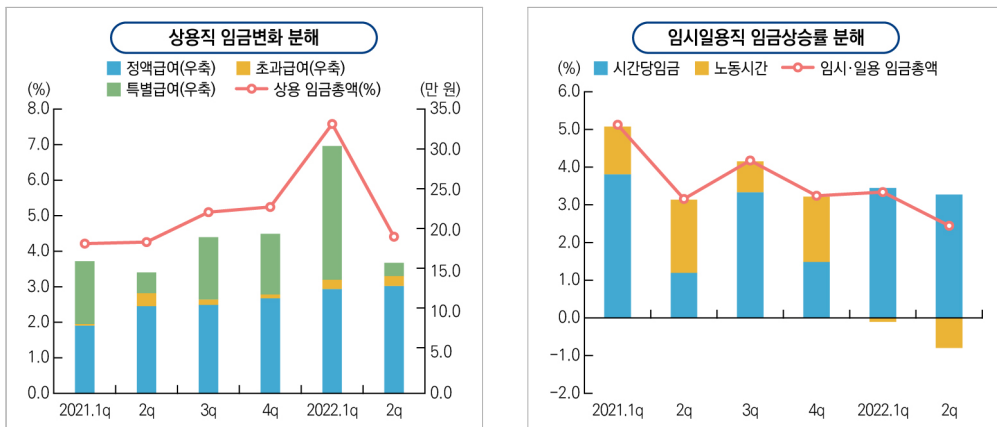
[그림 Ⅲ-31] 임금 변화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상반기의 임금상승률은 상용직의 임금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2022년 상반기 상용직 임금은 전년대비 6.1% 상승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2.9% 상승하였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 상승에 힘입어 1분기 7.6% 상승한 후 2분기 4.4%로 상승률이 소폭 축소되었다. 임시일용직 임금은 1분기 3.3%, 2분기 2.4% 상승하였다.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은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총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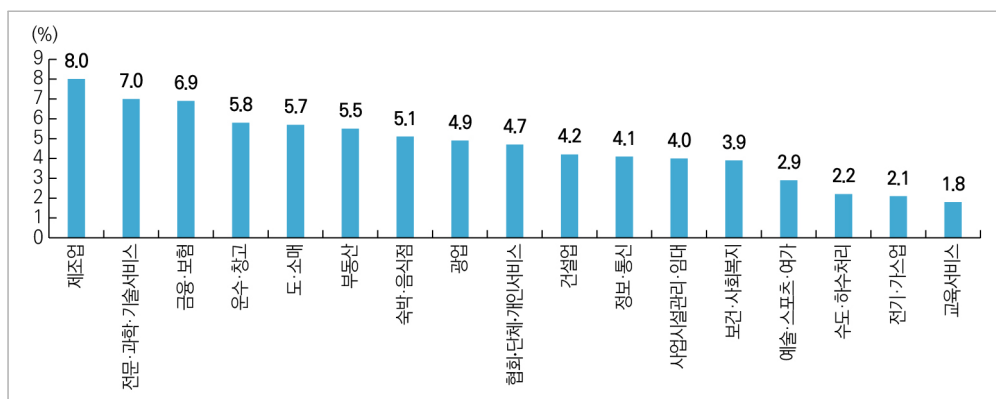
[그림 Ⅲ-32]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 분해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고, 서비스업 중 전문과학기술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도 약 7%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임금이 1.8% 상승하여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III-33] 산업별 임금 변화 추이(2022년 상반기)



자료: 고용노동부

하반기 중 임금상승률은 4.1% 증가하여, 2022년 중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4.9% 상승할 전망이다. 하반기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상반기에 비해 약 1.7%p 하락한 수치이다. 하반기는 경기 둔화로 1분기와 같은 높은 수준에 특별급여 지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기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던 제조업도 하반기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중 임금은 전년대비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GDP가 2.1%라는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자 수 증가세의 둔화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22년 5.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에도 3.3%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임금 상승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2023년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물가상승률이 4분기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²⁶⁾ 따라서, 2022년의 높은 물가수준이 2023년 임금수준에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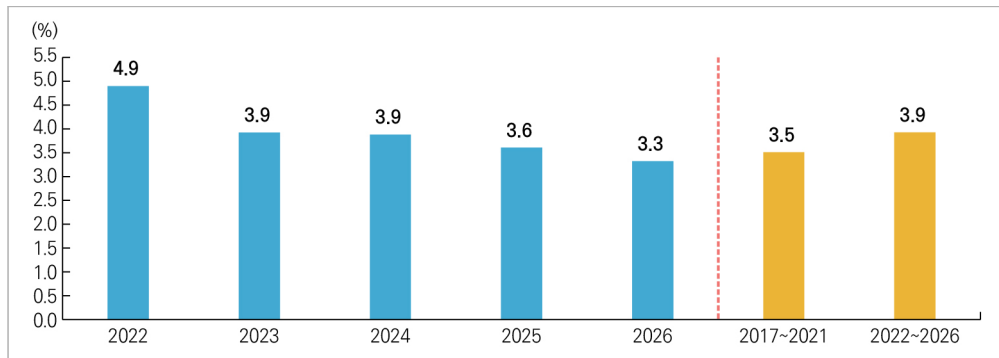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²⁷⁾

- 2022~2026년 중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3.9%로 전망
 - 지난 5년(2017~2021년, 3.5%) 대비 0.4%p 상승
 - 다만, 이러한 차이는 2020년의 낮은 임금상승률에 기인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4.9	3.9	3.9	3.6	3.3	3.5	3.9

2022~2026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3.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약 0.4%p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지난 5년의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낮은 임금상승률(1.1%)에 크게 기인하며, 2020년을 제외한 평균 임금상승률은 4.1%로 향후 5년의 상승률보다 높다.

[그림 Ⅲ-34]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중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GDP성장률은 임금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몫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

26) 김정성 외(2022)

27)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추계 및 공공부조(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급단가 증가율 전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는 노동생산성(= GDP/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은 생산 또는 생산성과는 별개로, 임금상승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래 [그림 III-35]은 임금상승률과, 이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22~2026년 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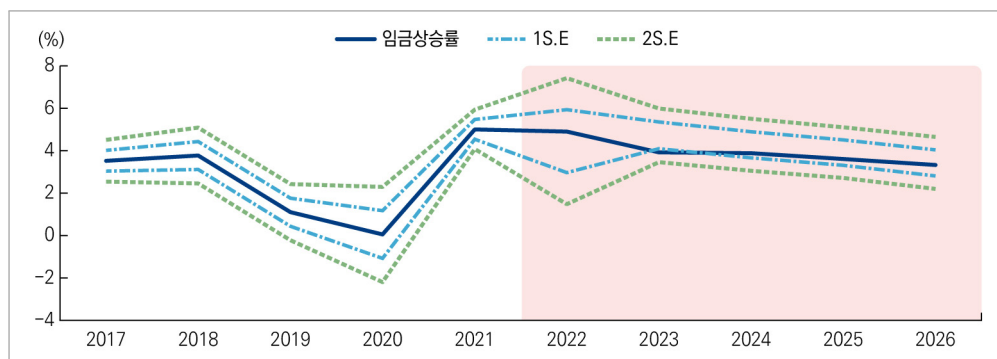
[그림 III-35] 임금상승률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 III-36]은 임금상승률에 대한 전망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임금상승률은 상반기의 실측치를 반영하여 소폭 상향조정하였고, 2023년부터의 임금상승률은 2022년 조정의 영향을 반영하여 하향조정하였다.

[그림 III-36] 임금상승률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경제」, 2022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지출 부문」, 2022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성장 및 금융 부문」, 2022
-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12.20.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2022. 8. 8.
- 김경수·김상미,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국회예산정책처, 2021.3.29
- 김정성·임용자·오강현·최열매·김윤경·이재진,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6호, 2022
- 송상윤·배기원,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2-30호, 2022
- 송상윤·배기원,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 2022-35호, 2022
- 안주엽,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의 기초분석」, 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1
- 통계청, 「2022년 6월 인구동향」, 2022
- 통계청, 「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2022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202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 한국생산성본부, 「2021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 2021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 2022.9.1
-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2020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 2022년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 2022
- François Lequiller Derek Blades,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2n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OECD, 2014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OECD Publishing, Paris, 2022, <https://do->

i.org/10.1787/1bb305a6-en.

OECD,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2018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2022.7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유가증권 상장사 수익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소득 및 고용·인구 부문-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IV)

발간일	2022년 10월 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3780)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ISBN 979-11-6799-084-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5-001979-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